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제 출 문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연구수행기관 : 문화다움

책임연구원 :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공동연구원 : 조아영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실장

연구원 : 오은영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연구위원

한찬희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연구원

김지원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 장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6
제3절 연구추진 프로세스	8

제2장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 분석

제1절 생활문화 패러다임 및 개념 분석	11
1. 생활문화 패러다임 검토	11
1.1. 문화에서 생활문화로 전환	11
1.2. 생활문화 관련 문화정책의 변화	13
2. 생활문화 개념 및 주요 이슈	18
2.1. 생활문화의 개념	18
2.2. 생활문화의 법률적 정의	22
2.3. 주요 이슈	23
제2절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지원정책 검토	24
1. 생활문화시설 개념과 범위 검토	24
1.1. 생활문화시설의 법적 개념	24
1.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생활문화 시설 개념	25
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검토	29
2.1.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현황	29
2.2. 생활문화시설 정책추진체계	36
3.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이슈	41
제3절 시사점 종합	43
1.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43
2. 생활문화시설 정책추진체계 관련	45

제3장 **생활문화시설 비교분석 및 이슈**

제1절 법적 개념에서의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49
1. 생활문화시설 현황	49
1.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상의 생활문화시설 범위 및 현황	49
1.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50
1.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시설	59
1.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62
1.5. 기타 고시시설	65
2. 시사점	70
제2절 지역문화진흥원 현 지원대상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71
1. 생활문화센터	72
1.1. 비전 및 미션	72
1.2. 법적 근거	73
1.3. 주요 사업영역	74
1.4. 사업성과	77
1.5. 주요 이슈	80
2. 문화의집	82
2.1. 비전 및 미션	82
2.2. 법적 근거	84
2.3. 주요 사업영역	85
2.4. 사업성과	86
2.5. 주요 이슈	87
3. 지방문화원	88
3.1. 비전 및 미션	88
3.2. 법적 근거	88
3.3. 주요 사업영역	90
3.4. 사업성과	91
3.5. 주요 이슈	91
4. 주요 이슈 및 시사점	93

제3절 생활문화시설 운영에서의 참조사례	95
1. 서울 마을예술창작소	95
1.1. 운영개요	95
1.2. 프로그램 운영현황	96
2. 경기도 창생공간	97
2.1. 운영개요	97
2.2. 프로그램 운영현황	97
3. 지역서점	99
3.1. 운영개요	99
3.2. 프로그램 운영현황	99
4. 작은도서관	101
4.1. 운영개요	101
4.2. 프로그램 운영현황	102
5. 주요 이슈 및 시사점	105
제4절 비교분석 이슈 및 시사점	106

제4장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개선방향**

제1절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111
1.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적 강화	111
1.1. 생활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활동으로의 정책방향 전환	111
1.2. 실질적인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안	112
1.3.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 운영 원칙에 대한 구체적 명시	114
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16
2.1. 지역 단위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표준조례> 모델 구축	116
2.2. 중앙 차원의 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 추진 제안	117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법 제정	119
제2절 생활문화 시설에서 활동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123
1.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구체화	123

1.1. 생활문화센터 중심의 지원정책 구체화	123
1.2. 지역의 자율적으로 생성된 문화공간과의 연계 방안 마련	125
2.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가이드 구축	128
2.1. 생활문화활동 중심 지원정책의 구체적 전략 수립	128
2.2. 상향식 자율적 프로그램 활성화 기반 마련	130
제3절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및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	133
1. 지역분권 및 자치 흐름에 맞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	133
1.1. 지역 중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133
1.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허브로서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 구체화	135
1.3. 지역형 모델 구축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역할 구체화	137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모델 구축 지원 및 확산	138
2.1. 생활문화시설 및 주체 간 협치 모델 구축 지원	138
2.2. 지역형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 프로그램 운영	139

제5장 연구결과 종합 및 후속연구 제안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45
1. 생활문화시설 조성 중심의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현 주소	145
1.1. 생활문화시설 개념의 포괄성	145
1.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현황 및 지원정책 추진	145
1.3.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이슈 및 시사점	148
2. 생활문화시설 개선방향 요약	151
2.1.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적 강화	151
2.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52
2.3. 생활문화 시설에서 활동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153
2.4.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및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	156
제2절 후속연구 제안	158
1.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제도 효율화를 위한 연구 추진	158
2. 생활문화진흥 표준조례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159

3. 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160
4.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문성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161

참고문헌

참고문헌	165
------------	-----

표목차

〈표 1〉 문화정책의 변화과정	14
〈표 2〉 시기별 문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내용	14
〈표 3〉 시기별 문화복지 정책의 목표 변화	16
〈표 4〉 생활문화에 대한 여러 정의들	19
〈표 5〉 기존문화와 생활문화의 주요 요소 비교	21
〈표 6〉 생활문화의 법률적 정의	22
〈표 7〉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정의	24
〈표 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24
〈표 9〉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시설 범위	26
〈표 10〉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주요 내용	29
〈표 11〉 기본계획 내 생활문화 진흥 세부내용	30
〈표 12〉 지자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현황	31
〈표 13〉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진흥 관련 지원사업	32
〈표 14〉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2018.5.16)	33
〈표 15〉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주요 법률 사항	36
〈표 16〉 문체부와 지자체 생활문화시설 지원 내용 비교	39
〈표 17〉 현행 법령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현황 비교	49
〈표 18〉 2017년 전국 공연시설 현황	51
〈표 19〉 2017년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52
〈표 20〉 2017년 전국 도서관 및 복합 종합시설(문예회관) 현황	54
〈표 21〉 2017년 전국 지역문화 복지시설 현황	56
〈표 22〉 2017년 전국 문화보급 전수시설 현황	59
〈표 23〉 2017년 전국 평생학습관 현황	60
〈표 24〉 전국 행복학습센터 2017년 현황	62
〈표 25〉 2017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현황	63
〈표 26〉 2015년 전국 마을회관 현황	65
〈표 27〉 전국 생활문화센터 현황	66
〈표 28〉 전국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주관부처 및 관계법령	67
〈표 29〉 전국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현황	69
〈표 30〉 생활문화센터 비전 및 미션	72
〈표 31〉 생활문화관련 조례 지자체별 시행 현황	74
〈표 32〉 지역문화진흥원 주요사업	75
〈표 33〉 생활문화센터 사업성과	77
〈표 34〉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식별 현황	79
〈표 35〉 문화의집 활동 미션	83

〈표 36〉 문화의집 운영현황 개요(2017)	85
〈표 37〉 문화의집 프로그램	86
〈표 38〉 지방문화원 운영현황 개요(2017)	90
〈표 39〉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90
〈표 4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내용	91
〈표 41〉 지방문화원 사업성과	91
〈표 42〉 마을예술창작소 단위 프로그램	96
〈표 43〉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96
〈표 44〉 창생공간 프로그램	98
〈표 45〉 지역서점 프로그램 사례	100
〈표 46〉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내역	102
〈표 4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례	103
〈표 48〉 협력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 예시(안)	113
〈표 49〉 생활문화 지원 및 시설운영 원칙 관련 조항 예시(안)	114
〈표 50〉 생활문화 지원 및 시설 운영의 원칙의 주요 내용	115
〈표 51〉 생활문화진흥 표준조례 주요 내용(안)	116
〈표 52〉 전국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 제안	117
〈표 53〉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법의 지향점	119
〈표 54〉 생활문화시설 지원대상 범위의 변화	125
〈표 5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시설 지원 원칙(안)	130
〈표 56〉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정책 추진 체계	147
〈표 57〉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표준조례 연구진 구성 방안	160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배경 및 목적	5
[그림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그림 3] 연구추진 프로세스	8
[그림 4]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의 범위	29
[그림 5]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	38
[그림 6]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달체계	40
[그림 7]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원칙	95
[그림 8] 경기도 창생공간 운영 방식	97
[그림 9] 지역서점 운영 방식	99
[그림 10] 지역형 생활문화 모델 구축을 위한 방법	107
[그림 11] 법률안 처리과정	122
[그림 12] 지역문화진흥원의 새로운 지원방식으로 전환	134
[그림 13] 지역내 시설 연계에서 지역 간 모델 공유를 위한	135
[그림 14] 확장된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 매개 모델(안)	136
[그림 15] 지역형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방안	140
[그림 16] 생활문화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후속연구과제	158
[그림 17]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 제도 강화를 위한 후속연구 방향(안)	159

서 장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추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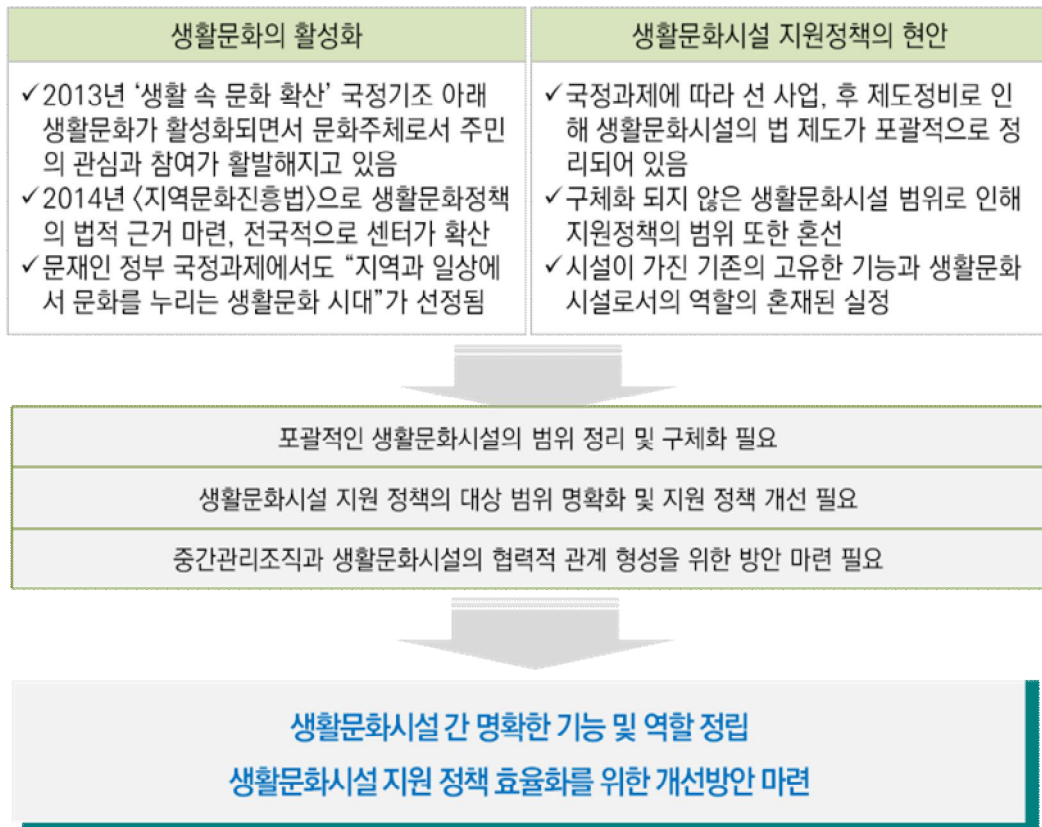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기본법>이 2013년 12월에 제정되고, 2014년에는 지역문화정책의 분기점을 형성한 <지역문화진흥법>에 제정, 시행되면서 생활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생활문화정책이 추진되면서 시민이 일상 속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안에서 생활 속 문화주체로 주민이 참여하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음.
-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아래,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전략 중,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생활문화 확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임.
-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등장하는 등 사람들은 일 외적으로 보내는 여가 및 개인성장의 시간을 중요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여가 및 취미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 이에 맞추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 또는 지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부터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시작,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문화 관련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생활문화시설 조성,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
- 그런데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정책 개념을 정립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

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시설에 생활문화시설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면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리되었고,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제도가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생활문화시설 범위가 지정됨. 또한 201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생활문화센터는 법적으로 생활문화시설로 정확하게 규정되기 보다는 고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등 여기에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각각의 법령에 맞추어 생활문화시설을 운영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시설 간 역할에 혼란이 발생하고 문화시설별 고유 기능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법으로 규정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거의 모든 문화시설을 포괄하고 있어 정책 집행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생활문화센터 외 다양한 생활문화시설들에서 구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나타날 수 있는 다각적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음.
-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은 변화하는 지역문화 정책환경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에서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는 여러 생활문화시설과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현 단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변화하는 지역문화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그림 1]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 분석

-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이슈 검토를 통해 혼선이 발생하게 된 정책적 맥락과 문제의식을 살펴봄.
- 생활문화시설 지원 관련 법·제도 및 지원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이슈를 살펴봄.

□ 생활문화시설 비교분석

- 법적 개념에서의 생활문화시설을 비교, 그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중 지역문화진흥원 현 지원대상 생활문화시설 비교를 통해 실제 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봄.
- 지역형 생활문화시설 모델 구축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 기능을 하는 문화시설 중 지역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생활문화시설 사례를 비교 분석함.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개선방향

-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 제도 정비방안과 생활문화시설 지원대상 구체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현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
- 지역분권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문화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생활문화시설 조성부터 운영까지 지역이 모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함.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생활문화시설 관련 전문가 및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지역미디어센터 등 생활문화시설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생활문화시설 관련 현황, 지원정책, 법 제도 등 이슈 공유를 통해 생활문화시설 범위, 운영주체 관련 개선방향을 논의함.

- 생활문화시설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개선방향 및 현장수요에 맞춘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함.

□ 정책제언

- 지역분권, 자치로의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을 조정하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 지역형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여 효율적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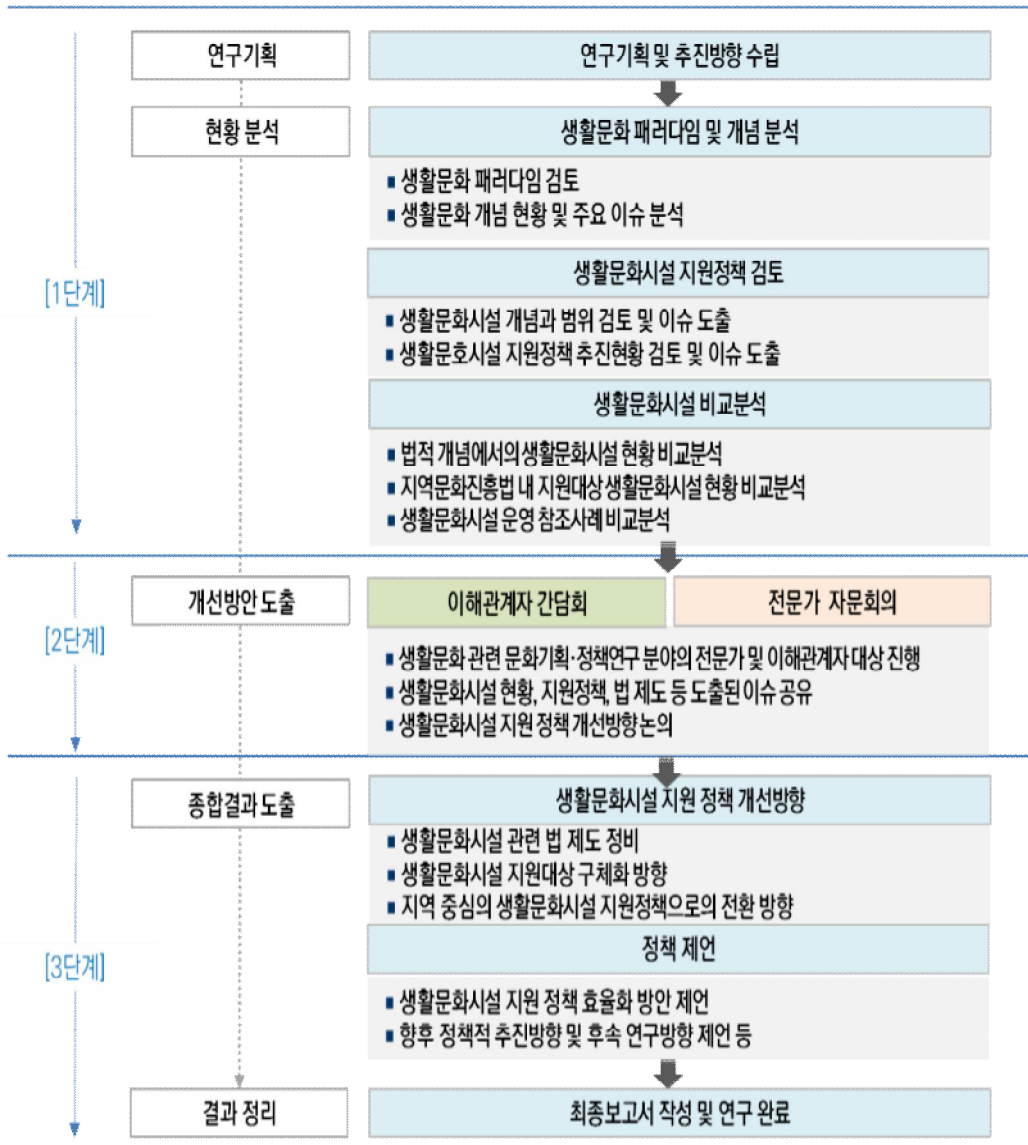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지원 정책 관련 이슈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이슈 검토 - 생활문화시설 지원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분석 및 이슈 검토 - 생활문화시설 지원 정책 추진체계 및 현황 분석 및 이슈 검토
생활문화시설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개념에서의 생활문화시설 비교 - 지역문화진흥법 현 지원대상 생활문화시설 비교 - 타 생활문화시설 운영 참조사례 비교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 제도 정비 방안 - 생활문화시설 지원대상의 구체화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방향 제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시설 관련 이슈 공유(현황, 지원정책, 법제도 등) - 생활문화시설 범위, 운영주체 관련 개선방향 논의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개선방향 논의 - 현장수요에 맞춘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분권, 자치로의 흐름 속에서의 지역문화진흥원 역할 조정 방안 제언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후속연구 제언

제3절 연구추진 프로세스

- 본 연구는 3단계로 진행함. 1단계는 연구기획 및 현황 분석, 2단계는 개선방안 도출, 3단계는 종합결과 도출 및 결과정리의 순이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그림 3] 연구추진 프로세스



제2장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 분석

제1절 생활문화 패러다임 및 개념 분석

제2절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지원정책 검토

제3절 시사점 종합

제1절 생활문화 패러다임 및 개념 분석

1. 생활문화 패러다임 검토

1.1. 문화에서 생활문화로 전환

□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체계를 뜻하면서, 동시에 ‘지적, 정신적, 심미적 발달 과정’을 의미했고, ‘지적 활동, 예술활동의 결과물과 행위로서, 교양의 결과물’을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했음¹⁾.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교양이나 예술관련 콘텐츠를 지칭하기도 했고, 일반적으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했음.
- 한국사회에서 문화는 서울 중심의 교양 있고 세련된 문화를 지칭하거나 지향하는 모습으로, 엘리트/고급 예술이 보다 가치 있는 예술로 인식되었으며²⁾, 문화예술 정책 또한 창작지원 및 향유 확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 이로 인해 문화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들이 관람하고 즐기는 방식의 향유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인식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지금도 남아 있음. 문화예술정책도 주로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수도권 지역에 박물관, 미술관 등을 건립하고 관람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
-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지역 전반으로 다양한 문화관련 인프라 및 활동이 확산되었고,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교양, 예술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교양과 예술을 넘어 삶으로 확장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대중문화도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서 등장하게 됨. 대중문화와 대중예술이 시민들 일상의 삶에 깊게 스며들어 문화

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

2) 최혜자(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와 예술에 대한 독자적인 기호를 형성하였고, 각자의 취향과 문화가 라이프 스타일로 인정되었음. 제한된 공간에서 단순히 예술작품을 관람 또는 수용하던 시민들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증가한 것임.

- 지역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문화활동이 기존의 전문예술 장르에 참여하여 관람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관람 중심의 문화향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문화예술의 창작자로서 활동에 관심을 갖는 이른바 능동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 문화향유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추구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생활문화 시대로의 사회적 변화

- 시민들은 이제 문화의 수용자로서 머무르지 않고 문화의 주체로서 일상의 영역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문화를 만드는 문화 생산자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음.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문화를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 관계의 방식을 만들게 되었음.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문화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이렇게 장르 중심의 예술로 문화를 보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연결된 가치로서 문화를 보는 시각이 점차 전환되는 가운데, 일상과 동떨어진 멀리 있는 문화가 아니라 근거리에서 향유하고, 활동하는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확산되게 됨. 이에 따라 일상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관계와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빠른 속도로 중앙과 지역의 문화정책으로서 생활문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문화향유, 생활문화개념이 중요하게 확산되면서, 일상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관계와 활동을 촉진하는 생활문화정책이 중요한 정책기조가 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정기조로 ‘생활 속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과제가 발표되었고, 지역문화진흥법(2014.01)이 제정되면서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지원 및 진흥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또

한 현 정부 문화정책에서도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중요한 기조로 다루고 있음.

1.2. 생활문화 관련 문화정책의 변화

□ 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 문화정책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음. 당시 정부는 일제 강점기 동안 왜곡되고 훼손되었던 한국문화를 수습하고, 공보(公報)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³⁾. 이러한 기조는 50년대와 60년대를 지나 70년대까지도 이어졌음.
- 70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학진흥이라는 맥락에서 지방문화 개념이 등장한 것임.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조는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것과 국민계몽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목표로서 문화정책이 국가적 과제로서 추진되었음.
- 1980년대는 문예진흥이라는 개념으로 문화정책이 수립되었고, 전통문화 위주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로 정책적 프레임이 확장되었음. 1990년대에는 중앙과 지방이 차별 없는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문화복지적 관점과 지역의 중요성이 등장함. 또한 지방문화는 중앙 중심적 사고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지역문화로 정책적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6년부터 지역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의집이 조성되었음.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이 고급문화예술을 지향했다면 문화의집은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공간이며, 쉽고 편리하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조성되었음⁴⁾.
- 당시 문화의집은 조성 방식(유희시설 이용)이나 프로그램 운영(강좌, 체험, 창작 등)에 있어서 지금의 생활문화센터와 비슷한 형태로 시작하였음.

3) 원향미(2016),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적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정갑영(2000), 「특수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의집 조성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지역문화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또한 일상 공간과 생활권 개념이 부각되면서 장르적 예술 중심의 문화 개념을 넘어 삶과 연계된 문화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문화정책도 이에 부합하는 정책적 프레임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이미 문화복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일상으로 다가가는 문화 개념이 사회적으로 경험되었고, 2000년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문화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정책을 바탕으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생활문화 개념이 등장하였음.

〈표 1〉 문화정책의 변화과정

시기	주요 내용
1940년대~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 강점기 제도 및 기관 개선 국민 계몽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문화〉창달이라는 개념에서 출발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학진흥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지방문화 개념이 발생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진흥〉이라는 개념으로 문화 정책이 수립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문화는 중앙 중심적 사고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지역문화〉로 전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화복지〉 개념 등장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의 해 등을 거치면 지역문화정책이 확장되기 시작 일상 및 생활권 등장으로 인해 문화의 개념 확장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가 등장 지역분권 및 문화자치에 대한 정책적 기반 마련

출처: 최혜자(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보완재구성

〈표 2〉 시기별 문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내용

시기	목표	주요 내용
1940년대 ~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 강점기 제도 및 기관 개선 국민 계몽 	—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문화 창달 	—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학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연구 지방문화 개념이 발생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변화와 함께 문화정책이 국학진흥에서 문예진흥으로 보다 확장함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를 통한 삶의 질적 제고 중앙/지방의 이분법 탈피 세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복지 개념의 등장 지방문화에서 지역문화로 개념의 전환 본격적인 문화공간의 확충

2000년대 초반	• 창의적 문화복지 국가	• 문화예술교육
2000년대 후반	•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2010년대 초반	• 생활공감형 문화정책	• 일상 및 생활권 등장으로 인해 문화의 개념 확장
2014년 이후	• 생활문화 진흥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가 등장

출처: 최혜자(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공급자 중심 문화복지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생활문화 정책으로 진화

- 생활문화 관련 한국 문화정책의 출발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문화복지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음.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문화복지 정책은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경제제일주의를 벗어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으로 제안되었으며, 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민 중심의 문화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것임⁵⁾.
-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활동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서울과 지역 또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발생해왔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는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문화민주화 정책을 시도하였고 1990년대 본격적으로 문화복지 개념과 함께 정책이 시작되었음. 이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면서 관련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음.
- 그런데 이 당시 문화복지 정책은 문화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문화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기 보단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때문에 수혜자인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공급형 문화복지 정책수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좁히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⁶⁾.

5) 양혜원(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최혜자(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000년대 이후 지역문화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기 시작했고, 문화의 개념 확장과 더불어 생활문화 개념이 등장하게 됨. 그리고 2010년대에 이르러 생활문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생활문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그동안 추진된 문화복지 정책이 공급자 관점에서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대중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생활문화 정책은 시민의 문화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적인 시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이 곧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주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임.

〈표 3〉 시기별 문화복지 정책의 목표 변화

시기	목표	주요사업
1990년대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세계화 • 문화감수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문화공간의 확충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 문화자원봉사
2000년대 초반 ~ 2000년대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 문화예술교육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감형 문화정책 • 사회적 약자 문화향유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문화예술교육 •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 문화바우처사업 본격 시행

출처: 양혜원(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념기념 세미나.

□ 지역문화정책의 진화: 지역분권 및 사람 중심의 문화로 전개

-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복지 개념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개념은 지역성 개념임.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국학진흥이라는 상황에서 지방문화 개념이 등장했고, 1990년대 지방문화라는 개념은 중앙 중심적 사고를 반영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역문화로 전환된 것이 이를 뒷받침⁷⁾.

7) 위의 책.

-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정보가 특정 계층으로 집중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앙과 지역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은 희석되고, 각 지역의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문화의 원천으로 기능하였음.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음.
-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문화적 역량이 집중되었던 한국에서 지역문화정책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역문화분권 및 문화자치로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음. 1995년 지방자치가 처음 실행되고 2000년 즈음에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20여년 사이 전국 지역에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확충되고, 지역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력이 증가함⁸⁾.
- 또한 지역문화기획 및 문화정책 관련 주체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생활 속 문화의 확산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요와 시민 문화창조 활동이 다변화되는 등 지역문화의 양적, 질적 성장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지역문화 특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문화정책이 요구되었음⁹⁾.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입증되고 있음¹⁰⁾.
- 이제 지역은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스스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문화가치 극대화를 기획하고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지역문화분권 및 문화자치의 기반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음. 또한 장기적이고 상생적인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효과를 지향하며, 문화의 주체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향유하고, 주인이 되는 사람 중심의 문화로 지역발전 비전을 구축해가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현 정부가 지역문화를 보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봄.

8) 추미경 외(2017), 『창원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 창원시청.

9) 위의 책.

10) 류정아(2012),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생활문화 개념 및 주요 이슈

2.1. 생활문화의 개념

□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 생활문화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어서 하나의 집약된 개념으로 정립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생활예술과 생활문화 개념이 대립하기도 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 먼저 생활예술 개념을 살펴보면, 강운주(2012)는 생활예술을 일상생활이라는 거점 속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누구나 참여하는 예술적 활동으로 정의함.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며, 인간관계를 조직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아와 타인과의 공감대를 표현하며 활동적인 삶을 이어감.
- 강운주의 생활예술 개념은 그동안 예술이 전문예술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접할 수 없었던 일상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먼 개념이었던 반면, 생활공간 속에서 누구나 쉽게, 서로 참여하여 창조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예술로서 정의하였음.
- 이로 인해 예술은 보다 쉽게 시민들에게 향유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이 제공되었음. 양건열(2014)의 경우도 강운주의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음. 양건열의 경우 생활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적 정의는 강운주의 생활예술에 기반하여 논의를 전개시켰음.
- 양건열(2014)은 생활문화가 단순관람에서 예술교육, 창작 및 발표, 문화봉사 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개인들의 문화활동이 개인적 차원에서 점차 공동체 차원으로, 그리고 단순 향유에서 창의적 활동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생활문화의 활동은 단순 향유에서 창의적 활동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맞춰, 감상형/학습형 활동, 창의형/봉사형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음. 즉 감상형은 창의형으로 발전되고, 학습형은 나아가 봉사형 활동으로 전개되는 개념임.

- 그 이후 조광호(2015), 정광렬(2016), 최혜자(2017)는 이러한 개념을 보다 확장하고 있음.

〈표 4〉 생활문화에 대한 여러 정의들

구분	주요 내용
강운주(2012)	생활문화를 생활예술로서 접근하여, 공동체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감성적 역량을 발휘하는 행위로서 소개함.
양건열(2014)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으로 정의함.
조광호(2015)	일상성, 주체성, 다양성이 속성으로 나타나며, 창작, 참여, 교육이 활동으로 나타나는 문화.
정광렬(2016)	지역 주민이 문화적 삶을 위해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활동.
최혜자(2017)	기존에 바라보던 교양으로서 문화가 아니라 보편적 국민 주체가 가진 삶으로서 문화.

- 조광호(2015)는 생활문화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속성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접근하였음. 생활문화의 속성으로는 일상성, 주체성, 다양성을 들고 있음. 일상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을 말함. 자발성은 누군가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문화를 원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행하며 활동하는 주체적 성격을 말함.
- 다양성은 일반적 의미의 예술 활동에서부터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행위 및 삶의 영위를 위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 삶의 교류와 공유를 공공활동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패턴을 생성하는 문화를 말함. 즉 삶의 모든 과정 자체를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설명함.
- 이와 같은 조광호의 생활문화 개념에는 활동의 측면도 고려하는데, 창작 활동, 참여활동, 교육활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함. 이러한 활동은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음.
- 최혜자(2017)는 문화가 가지는 본질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생활문화가 동

어 반복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개념이지만,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교양 및 고급 예술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를 보편적 국민 주체가 가진 삶의 문화로, 삶의 방식, 삶의 유산에 대해 지지받고 표현할 자유와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설명함.

□ 생활예술에서 생활문화로 점진적 확장

- 이와 같이 생활문화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가 되고 있으며, 생활예술의 개념에서 생활문화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왔음. 강운주(2012)의 논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에 나온 논의이며, 강운주가 분석하고자 했던 대상이 예술이기 때문에 생활예술에 접근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이후 전개된 논의들이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음.
- 강운주는 주민들의 일상공간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예술활동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을 생활예술로 정의하였음. 강운주의 생활예술 개념은 엘리트 중심의 예술에서 시민들의 일상 예술로 전개된 예술의 확장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음. 생활예술은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예술행위가 가능하다는 개념이지만, 생활예술은 예술행위라는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반면, 생활문화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예술활동은 물론이고 소통의 방식, 삶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보다 폭넓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생활문화임. 즉 예술활동이라는 대상이 점차 확장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적 문화활동으로 확장하였고, 생활예술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생활문화로 점진적 확장이 가능해진 것임.

□ 생활문화를 규정하는 주요 요소

-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생활문화의 중요한 요소를 규정하는데 있어 그동안 협의적 개념의 예술 관람과 향유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 왔던 요소와 대비하여 생활문화가 행위자, 장르, 공간, 활동방식 등에서의 변별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¹¹⁾.

〈표 5〉 기존문화와 생활문화의 주요 요소 비교

구분	기존 문화	생활 문화
행위자	- 전문가 중심의 문화 및 예술	- 향유자인 시민 중심의 문화 및 예술
장르	- 협의의 예술	- 생활양식으로 확장
공간	- 별도의 문화 수용 공간	- (생활권) 일상의 공간
활동 방식	- 수동적 수용	- 능동적 참여

출처: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중에서 대부분 논의에서 공히 주목하는 지점은 시민들의 일상성에 기반을 둔 능동적 참여 요소라 하겠음. 이 개념은 추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령 수동적 수용 형태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문화 기반을 만들어가는 문화정책의 일환이긴 하지만, 생활문화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생활문화 정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시민활동으로서 다양한 생활문화의 발전

- 생활문화의 관점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행위의 주체가 되며, 스스로 역할하고 활동하는 일상의 영역을 구성함. 이들의 공간은 공적 영역으로 구성된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가족 및 친구 등 주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 일상의 공간임.
-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문화주체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의 영역에서 생활문화를 구성하게 됨. 생활문화는 일상성에 기초를 두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일상적 변화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음.
- 시민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생활문화를 스스로 구성하고 만들어가고 있으며 생활문화로서 예술을 향유하게 되었음. 공급받는 문화예술의 개념의 중요성보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활문화로서 문화예술의 개념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 나아가 시민들의 문화활동은 지역의 관계 속에서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 시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은 마을공동체

11)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업,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과 연계되면서 지역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함. 즉, 특정 목적에 동원되거나 제한된 틀 속에서 향유하는 차원을 넘어 일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의 등장은 지역 문화생태계에 선순환구조의 토대가 되고 있음.

2.2. 생활문화의 법률적 정의

-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본격화되었음. 그 이전에는 문화라는 큰 범주 속에서 장르적 예술 개념의 문화예술진흥 또는 전통문화 기반 문화진흥 등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프레임이 주도적이었던 것에 비해 2000년대 들어와 일상과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제기되면서 일상적이면서 시민 주도적인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문화의 개념 및 법률적으로 포괄하는 대상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가 구체화된 것임.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표 6〉 생활문화의 법률적 정의

구분	정의	비고
생활문화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

- 지역문화진흥법에 정의된 생활문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성, 일상성, 참여라고 할 수 있음. 앞선 논의를 통해 기존 문화정책에서는 문화향유를 수동적 참여로 이해하고, 관람이 중시되는 문화활동과 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수립해왔음을 검토하였음. 때문에 현재 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생활문화 개념이 다소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화가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을 지양하고 일상성과 자발성을 통한 주체적 문화활동으로 생활문화를 정책적으로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생활문화는 능동적 참여와 보다 적극적인 문화활동에 개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정책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를 정책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열린 개념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정책적 시도

를 해야 함.

2.3. 주요 이슈

□ 생활문화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적 지향가치 구체화 필요

- 2000년대 이후 지역문화의 성장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문화활동,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 역량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구체화되면서 생활문화시대가 열리고 있음. 그러나 생활문화정책이 전국에 사업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에 비해 관련된 정책적 지향가치 및 담론이 충분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음. 이 부분은 향후 생활문화정책이 지속되고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점임.
- 때문에 생활문화시대 변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지향가치 정립 및 정책적 담론 형성이 필요함. 이를 통해 생활문화가 진정성 있게 구현될 수 있는 정책적 틀과 추진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 본질적 가치를 표현하는 원칙과 정책사업 내용의 연계 필요

- 생활문화를 보는 사회적 시각이 깊이 있게 형성되거나 정책적인 지향가치가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생활문화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서 원칙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진행된 유사한 사업들과의 변별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생활문화의 본질적 가치, 예를 들면 자발성, 일상성, 다양성, 참여성 등의 요소가 생활문화정책 추진사업에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함. 생활문화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성이 다각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문화향유 활성화 패턴을 답습하는 경향에 머물게 된다면 생활문화정책의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것임.

제2절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지원정책 검토

1. 생활문화시설 개념과 범위 검토

1.1. 생활문화시설의 법적 개념

- 생활문화의 개념이 넓은 의미로 정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시설의 법적 개념도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포괄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범주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표 7〉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정의

구분	정의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항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생활문화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평생교육법,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차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적 시설을 포괄하게 되었으며 범위가 광범위함.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분되는 생활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거의 모든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시설, 평생학습관 등의 학습시설을 포함하며, 지역자치센터와 마을회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의 범주가 광범위함.

〈표 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구분	상세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

	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창작공간 등
「평생교육원」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 학습관 및 평생 학습센터	-평생 학습관(시군구) -평생 학습센터(읍면동)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을회관(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2018.03.신설)

- 2018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서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음. 이처럼 문체부 고시(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의해 지정되는 생활문화시설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약 3년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포함될 수 있음.
- 가령 2018년 3월 고시에 포함된 지역서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후(2021년 6월 30일전까지)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활문화시설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음. 따라서 생활문화시설의 법적 개념은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고시 등에 의해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열린 체계로 설정되어 있음.

1.2. 선행연구에 나타난 생활문화 시설 개념

- 법률상 생활문화시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선행연구에서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법률적으로 포함되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은 그 광범위함으로 인해 구체적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사업대상으로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임.
- 우선, 양건열(2014)의 연구는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생활

문화센터 등을 비롯해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학습관 등을 제외한 법적 개념의 모든 문화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포괄하고 있음.

- 양건열의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을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이면 생활문화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러한 개념은 법률적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입장으로서는,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직접적인 정책지원대상으로 범주화하기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조광호(2015)는 생활문화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생활문화센터와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소규모의 시설들을 언급하고 있음. 이 연구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규정보다는 생활문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임. 따라서 생활문화가 나타나는 시설, 지역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생활문화시설이 되는 개념임.
- 이 연구는 법률상으로도 생활문화시설을 다양한 문화시설 중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간 또는 시설이라는 측면보다 ‘행위’에 초점을 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향후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이라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가 됨.
- 이 연구는 시설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생활문화센터로 정책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인 된다는 한계를 가짐. 반면,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시설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적 근거로서 검토될 수 있음.
- 양혜원(2015)의 연구는 기존 문화기반시설 배치의 효율화 방안을 언급하면서 생활문화시설로는 생활문화센터로 구성된 시설을 언급하고 있음. 이는 문화시설 배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생활문화 시설 개념에 접근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직접적인 생활문화시설로 고려하는 적극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음.

〈표 9〉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시설 범위

선행연구	연구주제	생활문화시설 범위 및 대상	근거
------	------	----------------	----

양건열 (2014)	생활문화시설 역할 제고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평생교육기관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각 시설의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시설을 접근함
조광호 (2015)	생활문화 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생활문화센터 및 생활문화 활동 지원 시설	-정책적으로 조성된 생활문화센터 중심
양혜원 (2015)	문화기반시설 배치 연구	-생활문화센터	-법률적 개념에 거리를 중심으로 제시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연구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된 시설
최혜자 (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 제도 연구	-생활문화가 나타나는 시설 (인증)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인증

- 정광렬(2016)의 연구는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 시설로 포함하고 있음. 이는 이른바 생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문체부의 직접 정책대상인 시설들임. 정광렬의 연구에서 세 시설이 포함된 이유는 지방문화원의 경우 고유의 미션 및 기능이 있지만, 최근에 지역의 생활 문화시설로서 역할을 모색 중이며, 문화의집도 문화향유 및 복지 기능에서 생활문화시설로 기능을 모색 중에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문체부의 생활문화 진흥 정책은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와 생활문화시설로서 기능을 시작한 지방문화원과 문화의집에 집중되었음. 이로 인해 세 시설이 주요한 생활문화시설로 고려되고 있으며 현재도 주요 정책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음.
- 결과적으로 정광렬의 연구는 생활문화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체계를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론적, 담론적 해석보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조성된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그 범주는 실제 정책이 적용된 사례인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원, 문화의집에 고정되고 있음.
- 최혜자(2017)의 연구는 다양한 문화시설 중에서 생활문화가 나타나는 시설이 생활문화시설이라고 정의함. 이는 법률적 개념과 동일하게 접근하

는 시각임과 동시에 생활문화시설 자체보다는 생활문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임. 이 연구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주가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을 절차적으로 인증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 한편,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 중 생활문화가 나타나는 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할 필요성을 제안하지만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 절차, 대상 선정 등의 어려움이 한계로 지적됨.
-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개념은 법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해 생활문화센터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엄격하게 개념 정의를 통해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하기 보단, 연구 수행의 목적에 따라서 생활문화시설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을 규정하는 법률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선행연구의 관점을 참고하여, 생활문화시설들의 기능 및 역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지원의 효율화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을 범주화하고자 함.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에서 다룸.

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검토

2.1.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현황

□ 상위정책: 문체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는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음. 제2조(정의)에 따르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림 4]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의 범위



출처: 최영화(2016),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열린충남』, 74호.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가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정책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됨. 문체부가 수립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문화 진흥은 ‘지역문화 역량 강화’ 안에 포함되어 있음.

〈표 10〉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주요 내용

대분류	중분류
지역문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생활문화 진흥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 문체부가 수립한 ‘생활문화 진흥’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과 ‘지역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로 나누어짐. 각각의 지원내용은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체부 산하 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실행되고 있음. 2018년 현재 생활문화 진흥은 세부내용 중에서 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지역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로 추진되고 있음.

〈표 11〉 기본계획 내 생활문화 진흥 세부내용

소분류	세부내용	주체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1) 지역생활문화시설 거점 조성을 위한 <u>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u> 2) <u>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u> 3)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 강화 및 프로그램 등 지원 4) 문화동호회 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진흥원
지역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	1) 주민 주도 자생적 생활문화 형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 2) 문화취약지역 주민참여형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 확대 4) 생활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축제 개최	문체부 진흥원 지자체

- 이 중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은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정책사업팀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6년 5월 생활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진흥원으로 이관되었음. 이후 2017년 12월 생활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지역정책: 지자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문체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단위에서 생활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별로 생활문화시설 조성 지원, 운영활성화 지원, 공동체 지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정례적으로 집계되는 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배경에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법정계획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형식적인 시행계획 수립 단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부(문체부)는 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특별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에 미온적이었음¹²⁾.

〈표 12〉 지자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현황

지자체	주요 내용	비고
인천광역시	인천만의 문화가치 창조 시민 생활 속 문화확산 지역문화 역량강화	—
광주광역시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 지역문화 연계 사업	생활문화 미포함
세종특별시	도, 농, 신, 구 도시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구축 세종문화의 창조, 활용을 통한 특성화	생활문화 미포함
전라북도	주민주도형 체계구축 문화창조 역량강화 생활문화의 활성화 취약계층 문화복지 전통문화 창조적 활용	—
전라북도 익산	문화예술지원 기반사업 생활문화진흥과 격차해소사업 역사문화자원 활용사업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
전라남도 여수	생활문화 확대 시민문화 향유 해양전통문화 창조적 계승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실현 문화가치 산업 세계화	—
경상남도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	—

출처: 각 지자체 시행계획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현황이 파악되는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과 함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만, 생활문화가 포함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음. 이는 생활문화 진흥이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 아니며,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역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임.

12) 내일신문(2016. 06. 17), 지자체들 ‘말로만 문화진흥’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199858

- 물론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문화 진흥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추진 시스템을 정비하고, 유인책을 마련해서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문체부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 협의도 가능하며, 지자체의 시행계획 이후 결과를 문체부에 환류 하게끔 하였지만,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문체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 지원정책

- 현 단계에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주로 문체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6년 생활문화진흥원으로 설립되어 2017년 12월 명칭이 변경된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생활문화 진흥관련 사업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실행하고 있음. 각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구성됨.

〈표 13〉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진흥 관련 지원사업

구분	추진 사업
1.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1) 생활문화센터 조성
2.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1)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컨설팅 2)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3) 생활문화센터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4)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아카이빙
3.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1)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2)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3) 생활문화 정책 도출 및 환류
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2) 생활문화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3) 생활문화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활동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

- 각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 또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등에 근거해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 및 기초 지자체에서 생활문화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총 32 곳으로 나타나고 있음(2018년 5월 16일 기준).
- 조례 명칭을 살펴보면,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생활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음.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생활문화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비해 생활문화센터 설치 조례는 시설을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하는 한계가 있음.
- 지자체의 자율성이 인정되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이 되기도 하고, 생활문화센터 설치가 될 수도 있지만, 생활문화 진흥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흥되는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흥되는지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큰 틀의 기초가 공유되지 못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없는 나머지 지역은 개별 조례 제정 없이 지역문화진흥법 체계 하에서 생활문화 진흥이 추진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지자체들의 생활문화 정책 추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표 14〉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2018.5.16)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7.9.21.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5.13.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7.1.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	2015.11.6.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7.12.27.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9.30.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2014.5.26.
8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4.4.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7.7.

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15.12.28.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8.10.
12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2.30.
13	경기도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7.1.5.
14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4.20.
15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2017.8.14.
16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6.5.
17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5.13.
18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016.12.30.
19	충청북도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2016.4.1.
2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5.13.
21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6.30.
22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6.10.
23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2017.7.7.
24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7.12.15.
2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7.28.
26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2017.3.22.
2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2.9.
28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016.7.18.
29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3.2.
3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5.4.
31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6.7.
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하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이후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활문화 정책이 중앙단위에서 수립되어도 지자체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문화 정책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생활문화진흥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조례에 따른 진흥이 가능한 반면, 생활문화진흥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 체계, 즉 문체부의 정책으로 인해 생활문화 진흥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계획 및 실행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가 공포된 지 길어야 3년 짧으면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문화진흥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추진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따라서 향후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계획 이후에는 환류 프로세스 구축 및 정착을 통해 문체부 및 지자체의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검토 시사점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생활문화에 관한 지역문화진흥법 내 조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상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규정 등을 통해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지원정책은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진흥과 생활문화시설 조성이 혼재되어서 적용되고 있음.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동 속에서 살펴볼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언급되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이 별도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법률로서 생활문화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문체부 내에서 생활문화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기능이 부가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등을 제외한 다양한 생활문화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미흡함.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어떻게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종합하면,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은 별도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센터 운영활성화에 중점을 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정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임.

2.2. 생활문화시설 정책추진체계

□ 지원주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크게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으로서 지정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
-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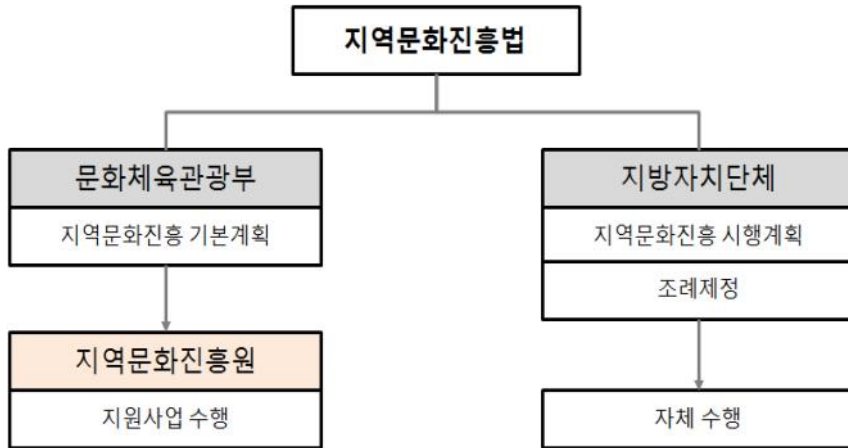
〈표 15〉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주요 법률 사항

법령	주요 내용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p>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	---

-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문체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이라는 이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문체부와 지자체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지역문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고 있음. 문체부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반면, 지자체의 경우 법률적으로 시행계획의 내용에 생활문화시설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생활문화시설 지원이 포함되는 구조임.
- 그러나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 지원이 모든 지역의 시행계획에 나타나지는 않으며, 지자체의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자체는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분포하고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지자체 특성이기도 하며, 문체부와 지자체 간의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지원에 관한 상시적인 소통 프로세스 구축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그림 5]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이른바 중앙정부(문체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문화시설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를 직접 추진하지 않고, 산하 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반면, 지역정부(지자체)는 시행계획과 자체조례를 통해 생활문화시설 정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어떠한 추진체계를 통해 추진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즉 생활문화시설 정책추진 체계는 한축으로는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축이 있고, 다른 한축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축으로 설명할 수 있음.
-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2015년 2월에 수립되었고, 시행기간은 2019년까지임. 이로 인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
- 지역문화진흥법과 기본계획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이 어떻게 지원되었고 그 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종합 평가연구가 실시되어 향후 5년간의 새로운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16〉 문체부와 지자체 생활문화시설 지원 내용 비교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비고
지원 내용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공통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 ·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
	-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 추진	-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시설 지원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시설 지원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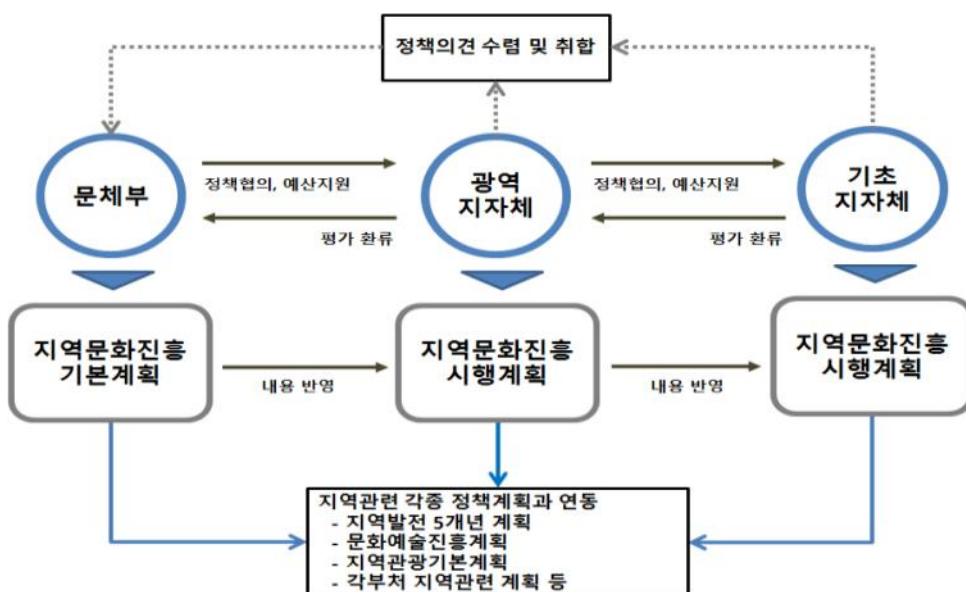
- 법률에 따른 문체부와 지자체의 생활문화시설 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는 부분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음. 큰 틀에서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기본계획/시행계획에서 내용이 상이해짐.
- 문체부의 경우 생활문화 활성화,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는데 반해, 지자체의 경우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만, 생활문화 관련 지원 내용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생활문화관련 정책은 문체부의 사업이 진흥원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상황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전달 및 환류체계

-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시장(서울), 광역시장(6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세종시), 도지사(8개 도), 특별자치도지사(제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
- 이와 마찬가지로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하고, 기초 지자체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
- 기초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체부의 기본계획 및 광역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기초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그리고 수립된 시행계획은 광역 지자체의 경우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5년마다 실적이 평가되며, 평가 결과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로 환류 되고 광역 지자체의 경우 문체부로 환류 됨.
- 이와 같은 지역문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달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남. 해당 그림은 조광호(2014)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한 것임.

[그림 6]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달체계



출처: 조광호(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의해 이와 같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의 시행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평가를 환류 해야 하는 시점에서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의 생활문화 진흥계획들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종료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때문에 생활문화시설 관련 지원정책도 이러한 환류체계와 맞물려 아직 문체부-지자체 간의 정책전달 및 환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3.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이슈

□ 생활문화시설 범주의 다양성에 비해 지원정책 추진은 아직 부족한 단계

- 현행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문화시설의 범주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주민들의 문화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을 몇 개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 문체부 내에서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황임.
- 최근 수년간 추진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주로 2014년부터 시작된 생활문화센터 구성과 운영활성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생활문화시설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못했음. 지역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전반적으로 문체부와 지자체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간의 연계성 부족

- 문체부와 지자체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프로세스가 상이함. 또한 생활문화센터 구성 및 운영활성화 중심의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화시설을 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물론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활문화센터 외 다양한 생활문화시설로 확산되는 단계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이는 문체부와 지자체간 생활문화시설 관련 정책적 소통과 협력,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성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 지자체는 법령에 의해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계획, 실행, 성과, 환류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미흡하고 전반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¹³⁾ 문체부와 지자체의 연계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음.

13) 내일신문(2016. 06. 17), 지자체들 ‘말로만 문화진흥’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199858

□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모든 생활문화시설을 지원하기 어려움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주체는 문체부와 지자체로 구분되지만, 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원정책의 추진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이로 인해 지자체 현실에 맞는 생활문화 정책 개발, 지원정책 수립 등의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주로 문체부의 정책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업무로만 나타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시설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기준 전국 142개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단기간에 상당한 양적 확산의 성과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런데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에는 생활문화센터 외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문체부 및 진흥원 차원에서 모든 시설을 포괄하며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지자체별로 독자적 생활문화 관련 지원정책 없이 주로 문체부와 진흥원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지역의 정책적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함.
- 생활문화정책 도입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향후 지역화,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진행으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 지역문화 실정을 바탕으로 전국의 생활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제3절 시사점 종합

1.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 생활문화시설 법적 범위의 포괄성에 비해서 지원정책 대상은 한정적

- 생활문화시설을 정의하는 법적 개념이 광의의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음. 따라서 광범위한 생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내 여러 생활문화시설이 지원정책 대상이 되어야 함.
- 그러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지원정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던 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대상은 비교적 소수의 생활문화시설로 제한적이었음. 이는 문체부와 진흥원의 한계라기 보단 관련법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였고, 양건열(2014)은 다양한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의 기능상 구분이 모호하지만, 다양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도출하고, 대상에 따른 적절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정광렬(2016)은 정책의 전달체계를 언급하면서, 문체부의 정책이 지자체로 원활히 전달되고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음. 또한 생활문화시설의 유형과 범주가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함. 때문에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도 한정적으로 수행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최혜자(2017)는 생활문화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상에 명시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생활문화시설이 매우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이로 인해 지원대상으로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생활문화센터 중심의 초기단계

- 최혜자(2017)의 조사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52,098개인데, 본 연구에서 최신 현황으로 재정리하면 51,973개로 집계됨¹⁴⁾. 이는 인구 10만 명당 100개의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임. 정부는 국정과제로 생활문화정책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을 3,080개로(2017년 기준 2,657개) 증가시킨다는 정책을 수립함.
- 문화시설들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으로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시설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어려움. 중앙정부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시설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움.
- 또한 지자체의 경우 생활문화시설 지원관련 정책 수립이나 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센터 조성과 운영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물론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관련한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성과의 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을 지원정책으로 포괄하고, 지자체와 연계를 통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개념은 매우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은 생활문화센터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 법률적으로 생활문화시설에 포괄되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생활문화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정책적으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기반으로 법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만들어 내는 지원정책이나 생활문화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즉, 잠재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정책수립으로 구체적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

14) 보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3장에서 설명하고 있음.

2. 생활문화시설 정책추진체계 관련

□ 지자체 지원정책 수립 및 문체부와와의 환류체계 구축 필요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수립 주체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시행계획 및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수립함.
- 현재 정책추진체계로 보면, 생활문화센터 구성과 운영활성화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나머지 포괄적 시설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임. 즉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센터로만 정책추진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추진체계는 지자체에서 구축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문체부와 협의할 수 있는 소통 및 환류체계로 연결해야 함. 이러한 프로세스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야 하지만,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유인책이 필요해 보임.
- 문체부의 경우 환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요청해야 함. 문체부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는 넓게 있지만, 실제로는 넓은 범위에 대한 지원정책을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지역 중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로의 전환 필요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생활문화진흥 정책이 추진된 지 약 4년이 시간이 경과하였음. 전반적인 사업이 지역의 수요 파악을 우선하기보다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현황, 운영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역분권과 문화자치로의 지역문화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지역수요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생활문화 정책 추진체계는 중앙차원의

문체부와 진흥원의 추진체계가 있고, 지자체의 추진체계가 작동되고 있지만 지역의 경우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책추진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즉, 중앙의 문체부 체계와 지역의 지자체 체계가 구축되고 이러한 체계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체계가 구체화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어야 지역의 수요 반영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음.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제3장

생활문화시설 비교분석 및 이슈

- 제1절 법적 개념에서의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 제2절 지역문화진흥원 현 지원대상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 제3절 생활문화시설 운영에서의 참조사례
- 제4절 비교분석 이슈 및 시사점

제1절 법적 개념에서의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1. 생활문화시설 현황

1.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상의 생활문화시설 범위 및 현황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분되는 생활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각 생활문화시설을 분류에 따라 정리한 선행연구¹⁵⁾를 참조하여 현황을 업데이트 하였음.
- 다만, 선행연구에 비해 다소 엄격한 현황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수치는 감소하였음. 예를 들어 영화상영관의 경우 선행연구는 특수 목적의 비상설 상영관을 포함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음. 마을회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수치는 행정구역상의 마을 수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실제 운영 중인 마을회관임.
- 이로 인해 최혜자(2017)의 조사는 생활문화시설이 52,098개로 나타났고, 본 연구는 51,973개로 나타났음. 이는 125개(0.24%) 감소한 수치이지만, 자료 기준에 따라 다소 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감소라고 판단되지 않음.

〈표 17〉 현행 법령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현황 비교

관련 법령		대상	선행연구 기준	업데이트 현황	비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공연장	1,290	1,268	▽
		영화상영관	466	452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박물관	826	853	△
		미술관	219	229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 시설	도서관	979	1,011	△
		작은도서관, 문고	5,595	5,914	△
	라. 복합된 종합시설	문예회관	229	236	△
	바. 그 밖에 지역문화	문화의집	114	100	▽

15) 최혜자(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령			대상	선행연구 기준	업데이트 현황	비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복지시설	복지회관	460	466	△
			문화체육센터	467	499	△
			청소년활동시설	799	804	△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228	228	－
			국악원	9	9	－
			전수교육관	153	153	－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 른 평생 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466	435	▽
			평생학습센터	92	12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 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	2,818	2,862	△
			마을회관	36,792	36,14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생활문화센터	53	142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43	41	▽
합계				52,098	51,973	▽

출처: 최혜자(2017, pp.59~61)의 조사 내용에 최신 현황을 추가함.

1.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1) 공연시설

□ 시설 개념

- 공연시설은 〈공연법〉 제2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 게 관람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함.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전국 공연시설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시설은 전국 992개이며, 공연장수는 1,268개, 객석 수는 536,416개로 나타났다.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전국 공연시설의 총 공연일수는 127,988일(평균 100.9일), 총 공연 횟수 174,191회(평균 137.4회), 총 관객 수 30,637,448명(평균 24,162명)으로 조사되었음¹⁶⁾.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공연시설

은 1.9개 공연장수는 2.4개 객석 수는 1,036개로 조사되었음.

〈표 18〉 2017년 전국 공연시설 현황

지역	공연시설	공연장수	객석수
서울	347	437	149,496
부산	58	75	25,138
대구	51	60	19,492
인천	34	40	14,141
광주	34	40	13,053
대전	36	43	18,139
울산	18	21	8,407
세종	2	2	1,120
경기	120	164	83,620
강원	39	51	27,401
충북	25	29	15,340
충남	29	44	24,641
전북	38	47	29,857
전남	37	50	22,387
경북	43	56	28,797
경남	50	76	33,504
제주	31	33	21,883
총계	992	1,268	536,416
인구10만 기준	1.9	2.4	1,036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전시시설

□ 시설 개념

○ 전시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크게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구분됨. 박물관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함.

○ 미술관이란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

16) 예술경영지원센터(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함.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2017년 전국 박물관은 총 853개로 나타남. 이 중 경기도가 133개로 가장 많은 박물관은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이 128개의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음. 전체 박물관의 30% 정도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 박물관 총 관람인원은 1억 851만 8천여 명이며, 이 중 서울 지역의 박물관 관람인원이 2,813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관람인원이 다녀갔음. 그 다음으로 제주도가 1,636만 1천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관람인원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7년 전국 미술관은 총 229개로 나타남. 이 중 경기도가 52개로 가장 많은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이 39개의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음. 전체 미술관의 39% 정도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 미술관 총 관람인원은 1,742만 1,800여 명이며, 이 중 서울 지역의 미술관 관람인원이 611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관람인원이 다녀갔음.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348만 600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관람인원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시시설로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주요 소장품들을 전시함. 시설의 목적 자체가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등 전문적인 영역의 활동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측면에서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관람 정도로 사료됨.

〈표 19〉 2017년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지역	박물관	박물관 관람인원	미술관	미술관 관람인원
서울	128	28,134,320	39	6,118,443
부산	26	2,532,856	6	599,059
대구	15	1,146,282	4	686,609

지역	박물관	박물관 관람인원	미술관	미술관 관람인원
인천	27	2,110,260	4	95,005
광주	10	1,101,646	9	219,812
대전	16	1,153,096	5	174,215
울산	9	1,081,996	—	—
세종	6	302,028	—	—
경기	133	12,161,951	52	3,480,642
강원	102	6,852,572	11	410,829
충북	44	1,896,495	8	560,042
충남	50	7,068,659	9	682,107
전북	42	4,912,143	15	325,917
전남	55	7,086,218	27	462,198
경북	66	5,304,296	11	425,492
경남	63	9,312,520	9	439,738
제주	61	16,361,046	20	2,741,693
총계	853	108,518,384	229	17,421,80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3) 도서관 및 복합시설

□ 시설개념

- 도서관시설은 〈도서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며, 복합시설은 문예회관을 말함.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함.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5조 제2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33제곱미터(약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춘 시설을 말함.
-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3호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을 말함.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도서관의 경우 전국에 총 1,011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244개로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서울이 148개로 두 번째로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음. 전체 도서관 중 38.7%가 이 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작은도서관은 전국에 총 5,914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361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926개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이 두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전국 작은도서관 중 38.6%의 비중을 차지함.
- 문예회관은 전국에 총 236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5개로 가장 많고 경북이 25개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그밖에 경남 21개, 강원 20개, 서울 20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라고 할 수 있음. 시민들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생활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움. 물론 많은 도서관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교양 강좌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활문화의 지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표 20〉 2017년 전국 도서관 및 복합 종합시설(문예회관) 현황

지역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예회관	문예회관 운영	
				공연일수	전시일수
서울	148	926	20	5,197	2,790
부산	40	362	11	3,869	2,070
대구	35	239	11	1,982	2,961
인천	47	240	9	1,237	1,582
광주	22	423	7	1,116	504
대전	24	210	4	801	79
울산	17	151	5	731	1,996
세종	5	27	1	149	71
경기	244	1,361	35	5,975	5,221
강원	54	182	20	1,468	1,991
충북	44	208	12	1,199	403
충남	59	278	18	1,856	1,510
전북	58	264	15	2,094	2,700
전남	64	248	19	1,822	1,680

경북	64	240	25	2,775	3,093
경남	65	415	21	2,419	3,108
제주	21	140	3	461	538
총계	1,011	5,914	236	35,151	32,29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문예회관은 복합 종합시설로 정의되기 때문에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공연일수는 총 35,151일이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975일로 가장 많고 서울이 5,197일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음. 이 두 지역이 전체 공연일수의 31.7%를 차지하고 있음.
- 전시일수는 총 32,297일이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221일로 가장 많고 경남이 3,108일, 경북이 3,093일로 3천일 이상 전시를 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음. 다수의 문화시설이 서울, 경기 중심에 분포되어 있고 운영되는 것에 비해, 문예회관의 경우 경상지역의 운영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문예회관 역시 문화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관람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생활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문예회관에서 생활문화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4) 지역문화 복지시설

□ 시설 개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 복지시설에는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이 포함됨. 문화의집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의됨.
- 복지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함.

-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임.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규정됨.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문화의집은 전국에 총 100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18개로 가장 많고 경남이 15개로 두 번째로 많고, 전북이 12개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이렇게 세 지역은 두 자릿수의 분포를 보이는데, 비해 다른 지역은 한 자릿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부산, 대구, 세종은 문화의집이 분포되지 않은 지역임.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참여라는 운영취지가 현재의 생활문화센터와 가장 유사한 편이지만 문화의집 운영주체나 지역별 지원여건에 따라 편차가 있어 전국적으로 고르게 활성화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임.
- 복지회관은 전국에 총 466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9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80개로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이 두 지역이 전국 복지회관 중 3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화체육센터는 전국에 총 499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경기도가 97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92개로 두 번째로 많은 문화체육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이 두 지역의 전체 문화체육센터의 37.8%를 차지하고 있음. 다른 지역의 분포에 비해서 두 지역의 집중이 높게 나타남.
- 청소년 활동시설은 전국에 총 804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158개로 가장 많은 시설이 있음. 그 다음 강원 81개, 경북 74개, 경남 65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청소년 활동시설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표 21〉 2017년 전국 지역문화 복지시설 현황

지역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서울	5	99	92	64
부산	—	53	22	27

지역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대구	—	26	14	16
인천	1	20	19	26
광주	4	18	17	11
대전	3	21	12	15
울산	4	8	7	10
세종	—	2	6	2
경기	9	80	97	158
강원	6	19	30	81
충북	7	13	18	51
충남	6	19	21	45
전북	12	17	38	57
전남	4	15	24	53
경북	6	16	34	74
경남	15	30	40	65
제주	18	10	8	49
총계	100	466	499	804

출처: 전국문화기반시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포털.

5) 문화보급 전수시설

□ 시설 개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보급 전수시설에는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교육관이 포함됨. 지방문화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 보급·전수시설로 규정되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¹⁷⁾.
- 국악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로 정의됨. 전수교육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국악원과 전수교육과 모두 전통문화를 계승 및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함.

17)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ccf.or.kr>)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총 228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서울로 25개임. 그 외에 경북이 23개, 전남이 22개로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음.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의 분포 비중이 24.5%에 머무르고 있음. 다른 시설들이 30%를 넘어 4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것이 비하면 지방문화원의 분포는 균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문화원은 1994년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활동기반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관 고유의 독자적인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는데 지방문화원의 주요 목적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것이며, 주로 향토문화 및 실버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국악원의 경우 문화예술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국에 9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크게 국립, 도립, 시립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국립의 경우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등 4개임. 도립의 경우 전북도립국악원 1개이며, 시립의 경우 대전연정국악원, 충남연정국악원, 목포시립국악원, 무안군립국악원 등 4개임.
- 국립국악원은 신라시대 국립음악기관인 음성서(音聲署)에 기원을 두고 있음. 1951년 부산에서 국립국악원으로 개원하였고, 국악의 전승, 연구, 교육, 홍보, 현대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¹⁸⁾. 국악의 전승 및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활문화라는 측면에서 국악이 가지는 특수성 또는 전문성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수교육관의 경우도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 건립되고 운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의 활동공간임.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전국에 총 153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경남이 22개로 가장 많으며, 경북이 18개, 경기와 충남이 17개로 나타났다.

18) 이승렬(1991), 「국립국악원이 역사적으로 해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 『국악원논문집』, 제3집, 191~195.

- 전수교육관은 1974년부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전승활동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민들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체험교육과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¹⁹⁾.

〈표 22〉 2017년 전국 문화보급 전수시설 현황

지역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교육관
서울	25	1	4
부산	14	1	4
대구	8	—	0
인천	8	—	2
광주	5	—	1
대전	5	1	4
울산	5	—	0
세종	1	—	0
경기	31	—	17
강원	18	—	14
충북	11	—	10
충남	16	1	17
전북	14	2	13
전남	22	3	22
경북	23	—	18
경남	20	—	22
제주	2	—	5
총계	228	9	153

* 서울(국립국악원), 부산(국립부산국악원), 대전(대전연정국악원), 충남(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전북(국립민속국악원, 전북도립국악원), 전남(국립남도국악원, 목포시립국악원, 무안군립국악원)²⁰⁾

출처: 전국문화기반시설, 국악연감 2016, 국립무형유산원홈페이지.

1.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시설

1) 평생학습관

□ 시설 개념

- 평생학습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평생

19)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http://www.nihc.go.kr>).

20) 국립(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도립국악원(전북도립국악원), 시립국악원(대전연정국악원, 충남연정국악원, 목포시립국악원, 무안군립국악원)

교육센터로서의 기존의 역할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연수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교육감이 설치 및 지정한 평생교육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평생교육기관을 말함²¹⁾.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평생학습관은 전국에 총 435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9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6개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임.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경북이 35개로 가장 많고 부산, 강원, 전남, 경남이 29개로 나타남.
- 평생학습관은 교육기관답게 많은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전체 2만 38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이 9,182개로 가장 많고 인문교양이 7,636개, 직업능력이 2,312개로 나타남.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수강료를 지불하고 강의를 듣는 유료 강좌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은 사설학원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문화예술 측면의 독창성을 가지기 어려움. 그러나 평생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 운영방식으로 보임.

〈표 23〉 2017년 전국 평생학습관 현황

지역	평생 학습관	프로그램 수*						
		합계	학력 보완	문자 해독	직업 능력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서울	69	4,671	23	83	455	1,975	2,092	43
부산	29	1,563	—	9	225	669	647	13
대구	14	478	—	9	32	340	94	3
인천	23	912	12	28	184	381	304	3
광주	20	590	50	14	63	172	284	7
대전	15	580	81	18	67	109	305	—
울산	6	154	6	2	24	80	42	—
세종	1	31	—	3	3	18	7	—
경기	56	2,513	170	58	525	626	1,117	17
강원	29	1,355	7	34	123	468	719	4

21) 한국교육개발원(2017),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

충북	22	693	10	3	90	272	316	2
충남	27	2,126	17	71	144	1,031	856	7
전북	23	926	2	44	54	164	661	1
전남	29	1,556	6	29	160	419	935	7
경북	35	1,275	26	7	140	543	559	—
경남	29	657	—	21	23	369	244	—
제주	8	304	—	1	32	98	173	—
합계	435	20,384	410	433	2,312	7,636	9,182	107

* 1개월 이상 운영하는 프로그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

2) 평생학습센터

□ 시설 개념

-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읍, 면, 동별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임.
- 법률적 용어로는 평생학습센터가 사용되고 정책적 용어로는 행복학습센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지역에 따라서 거점형은 평생학습센터로 읍면동의 경우 행복학습센터를 사용하기도 함.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행복학습센터는 전국 129개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음.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6개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5개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임. 경기와 강원도의 경우도 12개의 행복학습센터가 구성되어 있음.
-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민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인문교양 강좌의 형식을 탈피하고 있음. 글쓰기 교육, 댄스, 악기, 외국어, 미술 심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교육 또는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전북 지역의 행복학습센터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 학습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밀착된 학습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사례를 보였음. 이는 향후 생활문화시설이 지역 및 생활권에 밀착되어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에 시사 하는 바가 있음.

〈표 24〉 전국 행복학습센터 2017년 현황

구분	센터수	지자체
서울	15	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부산	16	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동구, 강서구*, 동래구*, 북구*, 수영구*, 중구*
대구	5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남구*
인천	6	남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광주	5	광산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
대전	4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울산	1	중구
세종	1	세종*
경기	12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안산시, 양평군, 시흥시*, 이천시*, 화성시*
강원	12	삼척시, 인제군, 태백시,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충북	8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충주시*
충남	6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논산시*, 태안군*
전북	8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부안군*, 전주시*
전남	11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나주시*, 영광군*, 장흥군*, 화순군*
경북	7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안동시, 의성군*
경남	10	거창군,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고성군, 밀양시, 합천군, 사천시*, 산청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129	—

2014년~2016년: 92개 시군구, 2017년: 신규 37개*

출처: 교육부(2017.06.12), 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보도자료.

1.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1) 지역자치센터

□ 시설 개념

-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된 것으로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의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함²²⁾.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전국에 주민자치센터는 총 2,862개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49개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422개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전북이 216개, 부산이 205개, 충남이 193개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가장 많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목적인 주민자치, 주민편의 관련 프로그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 도모, 주민자치기능 강화라는 목적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이 많음. 이로 인해 주민자치센터가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면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²³⁾.

〈표 25〉 2017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현황

지역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							
		합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타
서울	422	8,640	411	4,773	578	460	1,782	530	106
부산	205	3,502	247	1,636	446	174	690	279	30
대구	132	939	1	690	51	58	137	2	—
인천	148	2,551	92	1,716	172	27	484	50	10
광주	95	494	11	454	6	1	18	4	—
대전	79	898	29	657	62	34	96	20	—
울산	56	969	25	661	72	12	109	87	3
세종	14	386	3	351	5	—	22	5	—

22)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23) 한겨레(2016.12.12).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5372.html>

경기	549	11,812	315	7,665	764	177	2,488	367	36
강원	120	1,058	46	848	55	25	65	13	6
충북	153	1,070	99	833	48	14	73	3	-
충남	193	1,520	59	1,250	73	11	117	9	1
전북	216	1,208	57	940	50	45	94	20	2
전남	171	820	29	622	48	20	82	15	4
경북	76	550	7	452	17	5	69	-	-
경남	190	1,984	56	1,476	146	32	194	63	17
제주	43	1,240	258	299	287	84	115	192	5
합계	2,862	39,641	1,745	25,323	2,880	1,179	6,635	1,659	22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

2) 마을회관

□ 시설 개념

- 마을회관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제1종 근린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제1종 근린시설은 어느 지역에서나 허용되는데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임²⁴⁾.
- 마을회관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공동시설로 공급이 시작되었음. 마을 단위의 새마을 운동을 위해서 주민 회합이 필요했고 마을회관은 회의를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²⁵⁾.
- 이후 1980~1990년대를 지나면서 농촌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마을회관은 경로당의 기능으로 전환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마을회관을 복지 및 문화 기능을 하는 복합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전국의 마을회관은 총 36,142개로 집계되었음. 전체 마을 수는 36,792 곳이지만,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이 650곳을 제외하였음. 서울, 광주, 대전의 경우 마을로 구분되는 행정구역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설치되지 않았음.
- 마을회관은 농촌지역에서 유일하게 복지 및 문화시설로서 기능하기 때문

24) 김동원 외(2012),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 김성호(2012), 「농촌마을 마을회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마을 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제공, 한글교실, 마을 경조사, 샤워실, 건강관리실 등 주민 소통 공간과 생활 편의 제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²⁶⁾.

〈표 26〉 2015년 전국 마을회관 현황

지역	전체 마을수	마을회관	없음
서울	—	—	—
부산	166	162	4
대구	270	264	6
인천	261	256	5
광주	—	—	—
대전	—	—	—
울산	349	347	2
세종	259	253	6
경기	4,034	3,931	103
강원	2,228	2,172	56
충북	2,919	2,878	41
충남	4,307	4,282	25
전북	5,163	4,949	214
전남	6,768	6,688	80
경북	5,189	5,128	61
경남	4,707	4,662	45
제주	172	170	2
합계	36,792	36,142	650

출처: 농림어업총조사(2015), 지역조사.

1.5. 기타 고시시설

1) 생활문화센터

□ 시설 개념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²⁷⁾ 문화시설로

26) 김동원 외(2012), 위의 책.

27) 법령에는 건립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생활문화센터는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규정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포괄되는 수많은 생활문화시설 중 유일하게 생활문화를 직접 표방하며, 생활문화라는 명칭을 시설 이름에 사용하고 있음. 이는 생활문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유일한 사례임.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생활문화센터는 전국에 총 142개가 구성되어 있음.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와 전북이 16개로 가장 많이 조성한 지역이며, 부산이 15개로 두 번째로 많이 조성한 지역으로 나타남.
- 서울을 포함해 광역시 권역에 50개가 조성되었고, 나머지 지역에 92개가 조성되어있음.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27개(19%)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다른 문화시설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음.
- 주요 프로그램은 공간대관, 기자재 대여, 동호회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생활문화를 통한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제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제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공간 제공,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생활문화 실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생활문화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기존 문화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전환하여 조성하고 있음.

〈표 27〉 전국 생활문화센터 현황

지역	생활문화센터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3	—	1	2	—	—
부산	15	3	3	7	1	1
대구	10	2	3	1	1	3
인천	8	1	2	3	2	—
광주	8	2	1	1	3	1
대전	3	1	—	1	1	—
울산	3	2	1	—	—	—
세종	2	—	—	1	1	—
경기	16	6	3	2	3	2
강원	11	2	5	1	1	2
충북	3	1	2	—	—	—
충남	9	3	2	2	1	1
전북	16	5	4	3	2	2
전남	10	4	1	2	3	—
경북	9	3	—	3	2	1
경남	10	1	3	4	1	1
제주	6	—	2	3	1	—
합계	142	34	34	37	23	14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시설 개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을 말함.
- 그러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생활문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시설임. 미디어센터는 주민들의 지역 내 미디어 참여권 확대와 시청자로서 권익 증진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시설이기 때문임. 이로 인해 관계 법령에 의해 각 주관부처별로 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표 28〉 전국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주관부처 및 관계법령

주관부처	관계법령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90조의2

주관부처	관계법령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민간	-

출처: 각 부처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론 미디어 체험, 미디어 교육, 영상 제작 활동 등이 수반되지만, 이는 생활문화라는 접근보다는 시청자로서 권리 및 주권 행사에 더 가까운 개념임.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생활문화시설로 포괄하고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생활문화시설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물론 지역미디어센터가 미디어를 활용한 생활문화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고유 미션 및 기능 자체가 생활문화로 시작하지 않았음.
- 운영 주체도 상이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센터들은 시청자미디어센터로 불리고,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시청자미디어센터, 문체부 및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센터들은 영상미디어센터, 지자체 및 민간단체도 각자의 방식으로 미디어센터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음.

□ 주요 현황 및 프로그램

- 전국에 영상미디어센터는 41개로 조사되었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개로 가장 많고 경기, 강원, 경남이 4개, 인천과 전북이 3개로 나타났음. 서울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고른 분포로 보임. 운영 주체별로 보면, 문체부가 17개로 가장 많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자체가 7개씩 운영하고 있음.
- 센터의 특성상 운영 프로그램은 주로 미디어 교육, 시청자 영상제작 지원(교육, 장비 및 공간 대여, 동아리 활동 지원), 영화 및 드라마 상영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동일 공간에 복수로 설립되는 경우, 국정감사와 같은 상황에서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함.

- 그러나 방송에 대한 시청자 참여와 권익보호는 방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영상제작 능력 및 경험 향상은 문화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9〉 전국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현황

지역	합계	방통위	방문진	문체부	지자체	영진위	민간
서울	8	1	—	—	4	2	1
부산	1	1	—	—	—	—	—
대구	2	—	1	1	—	—	—
인천	3	1	—	2	—	—	—
광주	1	1	—	—	—	—	—
대전	1	1	—	—	—	—	—
울산	2	1	1	—	—	—	—
세종	—	—	—	—	—	—	—
경기	4	—	—	4	—	—	—
강원	4	1	—	2	1	—	—
충북	2	—	—	1	1	—	—
충남	2	—	—	2	—	—	—
전북	3	—	1	1	—	1	—
전남	2	—	1	1	—	—	—
경북	1	—	—	1	—	—	—
경남	4	—	1	1	1	—	1
제주	1	—	—	1	—	—	—
합계	41	7	5	17	7	3	2

출처: 김여라(2017).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 시사점

□ 각 문화시설마다 고유한 기능이 존재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활문화시설들의 전국적 현황 및 주요 기능을 살펴보았을 때, 각 문화시설들은 생활문화시설 이전에 고유한 시설의 기능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임.
- 시행령에서 이러한 문화시설들을 생활문화시설로서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지정하고 있지만, 각 시설들은 수행하여야 할 기관 고유의 미션과 기능이 존재하므로 생활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생활문화의 새로운 경향을 수용하고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이 생활문화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유 기능에 덧붙여 생활문화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들을 계발해야 하며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원활한 역할 실행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문화시설로서 고유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

-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문화시설들이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에 앞서, 각 문화시설들이 이미 지역 현장에서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 각 문화시설이 가진 고유 기능에 대한 전제 하에 지역문화진흥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고유의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긍정적인지, 생활문화시설의 기능을 병행하는 것이 긍정적인지를 판단하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함. 법령에서 생활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었다할지라도 문화시설이 가진 기존의 고유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상의 생활문화시설 규정은 생활문화시설의 정책 대상으로서 규정이라기 보단, 생활문화 활동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 규정으로 이해하기 보단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 맥락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음.

제2절 지역문화진흥원 현 지원대상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 법적 개념에서의 생활문화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문화진흥법 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포괄적 범위의 생활문화시설은 각기 고유한 기능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생활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은 부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 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문화시설 중에서 생활문화시설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의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생활문화시설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뚜렷하게 내려진 정의가 없는 상태임.
-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생활문화시설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음. 문화의집의 경우 문화의 집협회가 운영의 주체이며, 지방문화원의 경우 문화원연합회가 운영의 주체임. 생활문화센터는 정부의 생활문화 진흥 정책으로서 조성된 공간이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시설들은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넓은 범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됨.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포괄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이 존속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문화 활동이 나타나는 곳은 지역문화진흥원 지원사업의 대상인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생활문화시설이며, 생활문화시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더불어 지역 기반의 생활문화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바,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참조사례로 지역형 모델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서울의 ‘마을예술창작소’, 경기도의 ‘창생공간’, 민간주도의 자율적 운영공간인 ‘작은도서관’과 ‘지역서점’을 살펴보도록 함.

1. 생활문화센터

- 생활문화센터는 국정과제 사업으로 조성되었음.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인해 생활문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마찬가지로 2014년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음. 문화활동이 가능한 기존의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였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임.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 기반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한 생활문화가 형성되고 축적되는 관계 형성의 장으로 기능함.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1.1. 비전 및 미션²⁸⁾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과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공간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사회로 연결하고 나누며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임.
- 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삶의 여유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장소로, 각 지역의 생활문화센터는 공통 비전과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비전과 미션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표 30〉 생활문화센터 비전 및 미션

구분	내용	
비전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가 있는 삶 실현	
미션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주인인 주민참여 문화공간 -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및 장소 제공
	새로운 자기표현과 창조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의 학습, 체험, 생산의 공간 - 삶의 가치와 재미를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일상의 문화, 지역의 생활문화 형성

28) 권순석 외(2014),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구분	내용
관계 형성의 장	-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간 관계 맺기 -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문화가 형성되고 축적되는 장

1.2. 법적 근거

□ 중앙정부 관련 조례 및 규정

- 생활문화시설 관련법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음.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3.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 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 고시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로 대외적이기는 하지만 명령적인 것은 아니기에 법규의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따라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내 생활문화센터가 포함되어도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에 법적 성질 및 효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유사 문화시설과 중복되거나 새롭게 생겨나는 시설에 대한 추가 등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생활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및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정부 관련 조례 및 규정

- 지역에서는 여건에 맞는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규정에는 지역의 정체성과 미션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지역형 생활문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줌.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문화진흥조례 및 생활문화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조례는 지나친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조례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1〉 생활문화관련 조례 지자체별 시행 현황

관련 조례	구분	지자체 수	해당 지자체
생활문화진흥 조례	시도	7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대구시, 경기도, 충북, 제주
	시군구	5	부산 해운대구,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조례	시군구	20	부산 사하구, 부산 수영구, 대구 달성군, 인천 동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군포시, 강원 동해시, 강원 영월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당진시, 충남 보령시, 전북 무주군, 전남 광양시,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경북 군위군, 경북 성주군, 경북 포항시

- 그러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이지만,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관한 조례임. 센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설치한 지자체는 생활문화 진흥이 센터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에서 나타나는 생활문화는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지자체의 자율성이지만 반면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음. 따라서 표준 조례안이 제시된다면 이러한 한계는 보완될 수 있음.

1.3. 주요 사업영역

-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이 가능함.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프

로그램과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으며, 휴먼웨어 관련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과 ‘문화이모작’ 사업이 있음.

- 그밖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주최,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원의 비전 및 미션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 32〉 지역문화진흥원 주요사업

구분	내용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획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컨설팅 지원 -효과적 조성 시설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 및 분야별 전문가 매칭 -1:1 시설별 컨설팅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지역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 등 일상 속에 생활문화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센터 특성을 고려한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 활성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각 지역별 생활문화센터의 정보교류를 위한 토론회, 포럼,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아카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센터 현황파악, 사업평가, 공간 아카이빙 등 생활문화센터 및 정책에 대한 의미와 성과 분석 -향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진행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소모임 발굴 및 형성지원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지원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 -지역 특화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장르의 지역 대표 동호회가 참여하여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행 및 지역 간 소통, 교류진행 -2017년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등 지역문화단체로 구성된 축제 추진단 구성(협력체계 강화)

	생활문화 정책 도출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생활문화 현안 발굴 및 모색, 생활문화동호회 실태조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사례발굴·공유 (지역 순회 생활 문화 토론회 개최, 진국 생활문화동호회 실태조사,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아카이빙)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형성지원(기존) : 읍·면·동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생활문화 탐색형 활동지원(신규) : 공동의 이슈와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네트워크 진행
	생활문화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마을 자원과 주민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 및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컨설팅, 공동체 간의 연계를 위한 지역 교류활동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0년간 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성과평가 연구 진행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백서 및 사례집 제작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지역문화인력 인건비 지원	-지역문화인력의 지역시설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인건비 지원
	지역문화인력·시설 프로젝트 지원	-지역문화인력과 지역문화시설 담당자의 지역문화활성화 협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비 지원
	지역문화인력·시설 역량지원	-지역문화인력과 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문화이모작		-일상 속 마을 문화리더와 문화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고, 탐색하는 학습과정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지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2018 청춘마이크 사업	-전국에서 청년 문화예술인을 선정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
	직장문화배달 사업	-평일 문화생활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
	동동동(童動洞) 문화놀이터 사업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예술체험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홍보사업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정책 인지도 및 참여율 증대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1.4. 사업성

1) 사업운영

- 2014년부터 시작된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은 현재까지 시설조성, 프로그램 지원, 교육 및 워크숍 진행,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17년까지 4년의 기간 동안 700회 이상의 공간 컨설팅과 600회 이상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생활문화센터의 기반을 형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주민주도형의 사업으로 나아가고자 지역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생활문화센터,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업방향 및 성과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 등의 조사·연구 및 아카이빙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표 33〉 생활문화센터 사업성과

구분	내용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컨설팅	-컨설팅 프로그램 : 14개 -운영횟수 : 726회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춘 밀착형 컨설팅 진행 -지역주민 및 지역수요에 적합한 개방적 생활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활성화 도모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참여센터 : 89개소 -지원 프로그램 수 : 164개 -운영횟수 : 629회 -지역의 생활문화 콘텐츠 개발과 주민 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 마련 및 센터별 운영방안 특성화 도모
	생활문화센터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교육 및 워크숍 : 10회 -성과공유회 : 3회 -네트워크 지원사업 : 13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아카이빙	-매뉴얼 발간 : 6회 -연구보고서 발간 : 3회 -포럼 및 세미나 : 2회 -기타 : 3회
생활문화동호회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단체 수 : 163개

활성화 지원사업	활성화 지원	-참여 동호회 : 5,063팀 -운영횟수 : 459회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참여 동호회 : 417팀 -참여 동호회 인원 : 4,257명
	생활문화 정책 도출 및 환류	-연구보고서 발간 : 4회 -결과자료집 발간 : 2회 -디렉토리북 등 기타 : 3회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지원	-지원마을 수 : 170개(2009년~2018년)
	생활문화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 23회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155회 -네트워킹 지원 : 9회
	생활문화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활동	-2015년 아카이브 : 3회 -2016년 아카이브 : 2회 -2017년 아카이브 : 7회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지역문화인력 인건비 지원	-전국 28개 지역 35명 지역문화인력 활동(2017년 기준)
	지역문화인력 · 시설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 수 : 35개(2017년 기준) -운영횟수 : 283회(2017년 기준)
	지역문화인력 · 시설 역량지원	-집합교육 : 3회 -개별 컨설팅 : 1회 -그룹 컨설팅 : 2회
문화이모작		-문화매개자 양성 : 1,230명 -주민참여 : 14,000여명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운영단체 수 : 78팀 -운영횟수 : 466회 -참여자 수 : 539,487명
	2018 청춘마이크 사업	-운영팀 수 : 387팀 -운영 수 : 1,888회
	직장문화배달 사업	-운영단체 수 : 27팀 -운영횟수 : 52회 -참여자 수 : 16,050명
	동동동(童動洞) 문화놀이터 사업	-운영단체 수 : 148단체 -프로그램 : 920회 -참여자 수 : 125,027명
	문화가 있는 날 홍보사업	-공식 홈페이지 운영 -공식 SNS 채널 운영 -온라인 예매처 활용 광고 -축제 홍보부스 운영 -공식기자단 문화나르미 운영 -1인 미디어 협력 홍보 등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2) 생활문화센터 조성

- 생활문화센터는 역할, 공간형태, 운영주체별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 유형별 특징에 따라 각 센터에서는 운영 방향을 수립함. 운영방식에

따른 전국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4〉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식별 현황

지역	생활문화 센터	역할*		공간형태		운영주체		
		거점형	생활권형	독립형	공동형	주민	직영	위탁
서울	3	3	0	3	0	0	2	1
부산	15	7	8	5	10	0	14	1
대구	10	4	6	3	7	2	4	4
인천	8	3	5	5	3	0	4	4
광주	8	5	3	1	7	1	2	5
대전	3	2	1	0	3	0	3	0
울산	3	1	2	2	1	0	3	0
세종	2	0	2	1	1	0	2	0
경기	16	9	7	6	10	2	3	12
강원	11	6	5	5	6	1	3	7
충북	3	2	1	3	0	0	1	2
충남	9	4	5	2	7	2	3	5
전북	16	7	9	6	10	0	5	11
전남	10	3	7	3	7	2	5	3
경북	9	6	3	6	3	2	2	5
경남	10	1	9	6	4	6	1	3
제주	6	0	6	2	4	6	0	0
합계	142	63	79	59	83	24	57	63

* 역할구분은 적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구분임.

-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많이 조성된 지역은 경기(16개)와 전북(16개)이며, 다음으로 부산(15개), 강원(11개) 순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영 역할에 따라 거점형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9개), 생활권형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9개)로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많이 조성된 지역과 일치함. 이는 경기 지역은 도시형이기에 거점형이 많은 반면, 농촌형이 많은 전북은 생활권형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사료됨.
- 공간형태별로는 독립형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전북, 경북, 경남이 각 6개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형은 부산, 경기, 전북이 각 1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생활문화센터가 많이 조성된 지역인 경기와 전북지역

에서 공간형태별 운영센터 역시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운영주체별로는 주민자율형은 경남과 제주가 각 6개로 가장 많았으며, 직영형은 부산 14개, 위탁운영은 경기 1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민자율형이 많은 경남과 제주는 대부분 생활권형으로 주민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라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직영과 위탁이 많은 부산지역은 주민센터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곳이 많으며,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주민들에게 생활문화센터의 특징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위탁운영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은 경기도 각 지자체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관인 문화재단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의 체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5. 주요 이슈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주민과 사회가 관계 맺기를 통해 삶의 여유를 만들어가는 곳이기에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생활문화센터의 미션 및 비전에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시설로 명확하게 고시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범위가 있으나,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성질 및 효력이 약함. 즉 문체부 고시는 3년 단위로 해당 시설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활문화시설로서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데, 생활문화센터가 항구적으로 생활문화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고시 자체로는 장기적 근거로 다소 미흡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고시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로서 생활문화센터가 포함되는 것이며, 지역의 경우 자체 조례를 통해 생활문화시설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하는 생활문화공간, 공동체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역 특성이 반영된 생활문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조례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지역형 생활문화시설 조성 및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이 상이함. 이로 인해 정책 자체의 일관성이 미흡하며, 정책의 목표 설정이 어려움. 따라서 표준 조례 등을 제시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 생활문화시설 진흥의 대상, 지자체의 임무 등의 범위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인력 양성 교육 등 지역형 생활문화센터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용임. 일방적인 지원사업보다는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원 및 관리 아래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2. 문화의집

- 문화의집은 1990년대 중반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문화복지 증진 및 지역 확대를 위하여 199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되었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왔음.
- 문화의집 조성은 정책목표인 지역 문화복지 증진 및 확대에 부합되게 마을 단위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문화 및 여가활동을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음.
- 이후 문화의집은 지역적 특성(도시형, 농어촌형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을 조성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문화의집 조성의 긍정적 성과에 힘입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문화의집(여성가족부 담당)이 조성되었음.
- 2005년에는 정부 재정체계 개편으로 인해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지원이 지자체로 이관되었음. 이로 인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위해 문화의집이 기능하게 되었고, 보다 일상에서 주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음.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의집은 현재의 생활문화센터와 그 기능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자체로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지원 관련 행정 소관이 이전되면서 지원 및 활성화 관련 내용이 법적 의무조항으로 설정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문화의집 운영환경에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전국 문화의집 활동이 위축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됨.

2.1. 비전 및 미션

- 문화의집은 1996년 삶의 질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문화복지 정책 맥락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문화활동을 통한 체험학습과 감수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설립·운영됨. 생활권 중심의 문화시설을 전국에 배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면서, 생활권 문화시설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계기가 됨.

- 문화의집은 지역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소규모 문화활동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주민에게 예술창작 및 문화체험, 예술교육 등의 권리를 제공하는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수준 높은 예술과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민주화와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화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해왔음²⁹⁾.
- 문화의집은 생활권 내 위치하고 있는 문화창작 공간으로 문화의집을 통해 이상적인 삶을 형태를 누리고, 집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적인 창작활동을 실현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되었음.

〈표 35〉 문화의집 활동 미션

미션	내용
1. 문화의집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의 문화기반 환경으로써 기능한다	그 동안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공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모는 작지만 그 지역의 특질과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이 가능함
2. 문화의집은 복합문화공간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체험과 문화를 발현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 사람들이 틈틈이 문화의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꾸며놓으면, 국민들의 주거환경도 바뀌게 되어 국민들의 삶 또한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바뀌게 됨
3. 문화의집은 창작 능력과 창작 욕구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창작 능력과 창작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하며, 각 계층별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함
4. 문화의집은 여타의 시설들과 다르게 체험위주의 학습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인해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기능한다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이 지니는 ‘듣고 보는’ 단순관람 및 일방적 청취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직접 문화예술을 피부로 만지고, 느끼며,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라는 개념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등에서 쉽게 교류할 수 있음
5. 문화의집은 지역네트워크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치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이를 다시 피드백 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임 아울러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치의 공간이기도 함

29) 추미경 외(2006), 『변화하는 지역문화환경에서의 문화의집 발전방안: 생활권 문화창작공간으로서의 문화의집 강화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2. 법적 근거

- 문화의집은 1996년 정책적으로 조성 및 지원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앙에서의 지원(시설조성 및 운영)이 중단되었음.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인식이 낮은 시기였기에 이양되었다기 보다는 중앙의 지원에서 제외된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됨³⁰⁾.
- 정책 추진 초반에 정부에서는 문화의집 조성을 위해 약 600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되면서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만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게 됨. 그러나 2007년부터 지원하던 운영비도 전액 삭감하면서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³¹⁾.
- 물론 (사)한국문화의집협회가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에는 예산 부족, 유사시설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정체성 없어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문화의집이 정부 정책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추진된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정부가 사업을 지역으로 이관하였고, 관련 법률 및 조례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지원의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문화의집이 직면한 큰 문제임.
- 각 지자체의 문화의집은 정체성을 확보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법적인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기반이나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운영현황

- 지역민의 소규모 정도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동사무소, 지방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조성된 문화의집은 설립 당시 많은 관심을 일으켰으나, 시대적 변화로 인해 점차 기능이 모호해지면서 공간전환, 공간폐지 등으로 규모

30) 양혜원 외(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1) 양혜원 외(2013), 위의 책.

가 축소되고 있음.

- 현재 문화의 집은 100개소가 있으며, 인력운영은 평균적으로 책임자 아래 2~3명의 고정 운영요원과 보조인력 및 자원봉사인력을 추가하여 충족하고 있으며, 운영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함.
- 수도권과 지방으로 평균 운영현황을 비교하면, 문화의집 수는 지방이 약 5.6배 많이 설립되어 있으나 연간 예산액은 수도권이 약 3.6배 높음. 지자체에서는 지속적 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예산 대비 시설 수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6〉 문화의집 운영현황 개요(2017)

구분	문화의집 수	직원 수	프로그램 수	예산총액(천원)
수도권	15	3.60	36.00	251,393
지방	85	2.80	11.58	69,387
합계	100	2.92	15.24	96,688

출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7).

- 2014년부터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의집 중에서 적극적으로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도입한 곳이 늘어나 현재 문화의집이 생활문화센터를 병행하고 있는 곳이 총 9개소임.

2.3. 주요 사업영역

- 문화의집 운영 초반에는 문화센터, 문예회관 등과 다르게 생활권역의 시설로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적으며, 저렴한 수강료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 제고와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음.
- 그러나 지역별 운영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자발적·주체적인 활동보다는 소극적인 문화강좌나 다소 제한적인 관람형 활동 위주로 운영되기도 하여 기존의 문화센터 등 타 문화시설과의 변별력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음. 때문에 (사)한국문화의집협회에서는 2012년부터 강좌중심의 운영에서 주민 주도형

문화활동으로 문화의집 활동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문화의집 활동이 변화하기도 하였지만 전체 문화의집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한 측면도 있음.

- 문화의집이 제공한 주민 주도형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문화환경 체험, 문화욕구 유발, 창작욕구 실현, 교육,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7〉 문화의집 프로그램

구분	내용
문화환경 체험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 소규모 감상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정보 자료 프로그램
문화욕구 유발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감상 프로그램
창작욕구 실현 프로그램	공연예술 제작 프로그램, 미술품 제작 프로그램, 공방 제작 프로그램, 개인연습실 등
교육 프로그램	예술기초소양교육, 지역문화강좌, 단기 강좌,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지역참여 프로그램, 지역예술인 활동 증진 프로그램, 답사, 놀이, 축제, 경연 등

출처: 양혜원(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4. 사업성과

- 문화의집은 1996년 문화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지역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생활권역 생활문화시설로, 문화활동을 통한 체험학습과 감수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생활권역 중심의 생활문화시설이라는 점은 문화의집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전국에 균형적으로 배치 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시작됨.
-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동사무소, 지방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조성된 문화의집은 설립 당시 많은 관심을 일으켰으나,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문화시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점차 기능이 약해지면서 공간전환, 공간폐지 등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집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생활문화

강좌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주민들은 생활문화 강좌를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의 성과를 얻고 있음.

2.5. 주요 이슈

- 문화의집은 생활권 내 위치한 생활문화 창작공간이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소규모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설립 당시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운영비 지원이 중단, 지자체에서도 문화의집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문화의집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고, 현재는 중앙에서도 운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에 포함되는 시설들 중 문화의집만의 명확한 법 제도가 수립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서의 보호 장치가 없으며, 중앙단위에서의 지원근거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라는 과제 아래 생활문화시설이 증가하면서 문화의집 정체성 및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
- 2014년부터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의집 중에서 적극적으로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도입한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화의집 자체의 법적 보호장치 및 운영기반이 허약하고, 문화의집 본래 미션과 활동이 현 생활문화센터의 미션 및 활동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 문임.
- 정리하면, 문화의집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사 시설 증가로 인해 문화의집은 정체성 확립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존폐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또한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도입한 곳이 늘어나면서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의 연계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3.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향토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1950년 자생적으로 형성된 조직임. 1965년 제정된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1994년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이 폐지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문화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됨.
- 또한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하였고, 전국의 지방문화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지방문화원의 대표 사업은 향토자료를 포함한 지역문화의 계발 및 보존임.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정체성은 지역의 향토 문화에 있으며, 최근에 실버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3.1. 비전 및 미션

-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 사업 수행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된 지방문화원은 1965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문화시설임.
-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지역행사 개최,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3.2. 법적 근거

-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1950년대 자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60년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기 시작함³²⁾.
- <지방문화진흥법>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32) 양혜원 외(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발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 설립인가 기준, 기준 시설, 임원,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문화원의 정치나 종교 활동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³⁾.
- 그러나 1996년 문화의집의 설립, 2014년 생활문화시설의 조성 등 생활문화시설증가로 유사기관이 등장하고, 지역거점 문화시설로 문화재단이 기능하게 되면서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외 11명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이는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극심한 인구 편차로 인해 주민들의 문화생활 지원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확장하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 운영현황

- 문화원은 현재 228개소가 있으며, 평균 직원 수는 사무국장(1명), 직원(1~3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업 수 대비 직원 수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부족함.
- 수도권과 지방으로 평균 운영현황을 비교하면, 문화원 수는 지방이 약 2.5배 많이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연간 예산액은 수도권이 약 1.3배 높으며, 자체자금 비중 또한 약 3배가 높음. 총 예산대비 자체자금 비중은 전체 19.83%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지방에서는 자체자금 확대가 필요함.

33) 김근호 외(2017),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38〉 지방문화원 운영현황 개요(2017)

구분	문화원 수	직원 수	연간예산액(천원)	자체자금(천원)	자체자금 비중
수도권	64	4.47	604,015	187,101	30.98%
지방	164	3.11	443,241	61,647	13.91%
합계	228	3.49	488,371	96,862	19.83%

출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7).

3.3. 주요 사업영역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토사대중화사업,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방문화원 종사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원 별로 문화학교·문화센터 및 문화시설 운영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수의 문화원은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계발 및 보존사업, 향토사 발굴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의 고유기능보다는 문화센터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자체 시설 위탁) 등을 주로 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표 39〉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첫째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둘째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셋째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넷째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다섯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여섯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일곱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여덟째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지방문화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사업으로는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전국향토문화공모전, 교육연수, 문화수요창출,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 사업 등이 있음. 이중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방문화원이 초기부터 구축해온 대표적 사업임.

〈표 4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내용

-
- 정체성이 모호하였던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향토사 연구와 실버문화 중심으로 명확히 정립하는데 기여함
 - 사업대상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지방문화원은 지원대상에서 탈락, 사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함
 - 문화활동가 양성 → 문화매개자 활동 → 문화일자리 창출의 자생적 문화생태계의 단계적 목표 구축이 가능함
 - 지역사회의 매개자로 어르신문화공동체 창출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함
-

3.4. 사업성과

- 정부는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구심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대표 사업인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실현 성취를 돕고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6년까지 약 2,80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2009년 사업비를 국고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참여인원 또한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 그 외 대표사업인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표 41〉 지방문화원 사업성과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토사 대중화 사업	-	-	11개	28개	46개	50개	50개	53개	35개	26개	32개	30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10개	51개	76개	100개	137개	170개	202개	341개	449개	443개	435개	391개

3.5. 주요 이슈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정부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지역문화 거점시설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각 문화원들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점점 생활문화가 활성화되고 문화재단, 문화의집, 문예회관 등 유사시설이 증가하면서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에 둘 이상의 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인데, 지방문화원을 활성화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유사한 생활문화시설들의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임.
- 오히려 지방문화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정비하는 정책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문화시설들 간의 기능 정리가 필요함. 이러한 개정안이 발표될 수 있는 이유는 지방문화원이 독자적인 진흥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단순히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지역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지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4.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중 지역문화진흥원의 현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의 운영현황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생활문화센터 관련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는 생활권 내 위치하고 있는 문화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지만, 각 센터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운영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생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생활문화시설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범위이므로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엔 성질 및 효력이 다소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생활문화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제대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생활문화센터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효과적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화 환경 속에서 지역의 실질적 수요와 필요에 따른 다양한 지역형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의집 관련

- 문화의집은 생활권 내 위치한 문화시설로 기능과 역할에서 지역주민의 참여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었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강좌 위주의 주민참여는 소극적 문화활동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타 문화시설과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함.
- 점차 문화의집 기능이 모호해지고, 중앙정부 지원중단, 지자체의 낮은 관심도 등으로 인해 점차 공간의 폐지, 타 시설로의 전환 등 규모가 축

소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의집만의 명확한 법 제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 지원이 불안정하기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 생활문화센터와 가장 기능이 유사한 문화의집은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도입한 곳이 늘어나면서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의 연계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

□ 지방문화원 관련

-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생적 조직으로 향토문화 보존과 실버문화가 주요 사업임. 그러나 문화시설의 증가와 바뀌어가는 시대흐름에 맞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문화원 고유의 성격을 유지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법 제도를 개정하려 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의집은 미션과 비전, 운영목적에 있어 유사한 시설이지만, 지방문화원의 경우 향토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생활문화시설과는 설립취지와 목적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문체부는 이상과 같이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을 주요 대상으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진행해왔음. 생활문화센터는 신규로 건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문화의집과 지방문화원이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의집은 그 기능이 점차 수렴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경우 자기 고유 미션과 생활문화시설과의 역할이 다소 중복되고 있음. 따라서 각 기능의 목적 및 지역 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이와 같은 대상이 지원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문체부와 진흥원으로 이어지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이 센터 조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자체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것에도 그 이유가 있음. 법률상 다양한 시설이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도 다양하게 수립해야 하며, 생활문화와 관련한 다양성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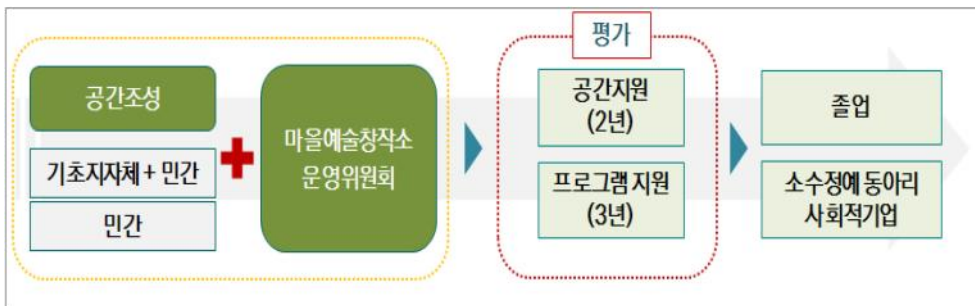
제3절 생활문화시설 운영에서의 참조사례

1. 서울 마을예술창작소

1.1. 운영개요

- 서울 마을예술창작소(이하 마술소)는 ‘지역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일상 예술 공간’으로 주민이 사는 골목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품고 이웃과 함께 만드는 예술활동을 지향함.
- 마술소 조성 사업은 2012년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기초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모델과 민간이 공간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모델을 통해 공간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6년 마술소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음.
- 마술소 사업은 선정되면 5년간의 지원을 받게 됨. 초반 2년은 공간지원을 받으며, 공간이 조성된 이후 3년간은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운영의 내실화를 높임.
-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진행하며, 만 5년간의 지원을 받은 마술소는 ‘졸업’하여 자율적 운영을 진행하고,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서의 조건이 맞지 않는 마술소는 소수정예 동아리 또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

[그림 7]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원칙



1.2. 프로그램 운영현황

- 마술소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프로그램형, 지역기반형, 비즈니스형, 생활문화유형 등 크게 4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 단위 별로 지원받고 있음.
- 지역의 예술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동아리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은 생활문화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있음.

〈표 42〉 마을예술창작소 단위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형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기반형	마을예술창작소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을 기반하는 사업
비즈니스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을 위해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
생활문화유형	예술동아리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출처: 마을예술창작소 홈페이지(<http://artmasulso.net>)

- 단위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의 관심에 맞추어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다양한 장르별 예술모임, 손작업 공방 등을 진행하고 있음. 프로그램은 마술소 조성운영 원칙인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에 따라 운영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표 43〉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구분	내용
자율성 원칙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공공성 원칙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마을성 원칙	-생활문화활동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가지고 공간운영
지속성 원칙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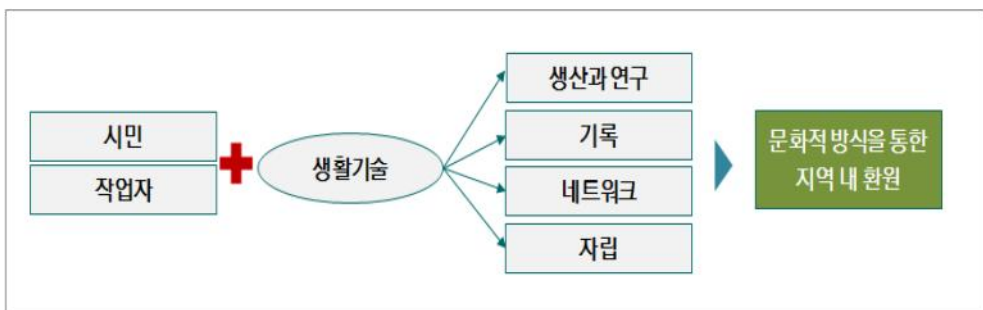
출처: 마을예술창작소 홈페이지(<http://artmasulso.net>)

2. 경기도 창생공간

2.1. 운영개요

- 창생공간(Maker Space)은 여러 작품이나 도구 등을 만들기 좋아하는 시민과 작업자를 위한 열린 제작공간으로, 생활기술을 바탕으로 생산과 연구, 기록, 네트워크, 자립 등을 고민하고 인적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공간임.
- 메이커 무브먼트(Maker Movement)에서 착안하여 경기도 지역 여건에 맞게 대안적인 공간조성 방안으로 활용됨. 2016년 수원, 성남, 안양, 남양주에 4개 공간을 오픈하였고, 지속적으로 구도심 및 농촌지역에 거점 공간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 창생공간의 주요 기능은 커뮤니티 활동의 지속성으로 지역 멤버십 확보, 자원 마련을 실험하며, 제작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노인, 주민, 청년을 잇는 ‘공공적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8] 경기도 창생공간 운영 방식



2.2. 프로그램 운영현황

- 2018년 현재 수원, 성남, 안양, 남양주, 오산의 5개 지역에서 발효, 출판기획, 리사이클링, 재봉, 포켓스토브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공성’과 ‘자율성’ 운영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이후 지역 내 유희 인력인 시니어의 기술력과 예술가의 디자인 기획을

통하여 시니어 대상 상품을 개발하고, 밀접한 생활기술을 공유하여 시니어 여가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임.

〈표 44〉 창생공간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분야	주요활동
수원	생활적정랩 배꼽	발효	-발효 관련 제조/제작 -제조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문화적 활동 등
	곧바로 책, 방	출판기획, 지역아카이브	-출판교육 및 실습 -지역아카이브 서점 운영 및 판매 등
성남	재미	리사이클링	-목공예, 도예, 생활기술 교육, 리사이클 링 및 리폼 등
안양	이모저모 도모소	재봉	-소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한 제작 워크숍 -소셜 프로덕트 제작 -아트 에디션 컨설팅 등
남양주	공도창공 수동	포켓스토브	-적정기술 스토브 제작 -보급행사 -생활밀착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용 등
	천문공작실	천체망원경 제작	-천체망원경 제작 -천체 관측 등
오산	빙고믹스	영상디자인 콘텐츠, 팟캐스트 방송	-팟캐스트 방송 제작 -커뮤니티 방송국 운영 -미디어 아트 전시 등

3. 지역서점

3.1. 운영개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서점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서점 활성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
- 선정된 서점들은 여러 문화활동을 개최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행사 경험을 전국 서점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음. 대형 프렌차이즈 서점을 제외한 지역 중소형 서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선정된 신규 서점은 문화활동 및 시설비 500만 원, 기존 지원 서점은 문화활동비 300만 원, 컨소시엄 서점에게는 운영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이어 중소형 서점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며,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와 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터전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9] 지역서점 운영 방식



3.2. 프로그램 운영현황

- 지역서점에서 진행하는 문화활동은 저자 초청 강연회, 독서토론회, 책 읽어주기, 시낭송, 북 콘서트 등 책과 관련된 문화활동 및 학교, 도서관 등과 협업(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문화행사 등이 있음.

- 생활문화시설과는 프로그램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나, 지역주민인 서점주인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생활문화시설 운영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표 45〉 지역서점 프로그램 사례

구분	서점	주요활동
괴산	숲 속 작은 책방	-백창화 작가가 운영하는 가정식 서점 -책을 찾는 여행객을 위한 민박시설 운영
통영	남해의 봄날	-작은 출판사가 운영하는 책방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소개하며,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 수행
일산	미스터버티고	-문학전문서점 -전 세계 문학작품이 작가의 출신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 맥주를 제공
서울	퇴근길 책 한잔	-책과 술, 영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심야서점으로 주 고객층은 직장인으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운영
전주	호남문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서점 아저씨 -서점 견학 및 체험활동(책갈피 만들기, 북 커버 만들기 등) 프로그램 진행

4. 작은도서관

4.1. 운영개요

-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소 분관 내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주민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통합 서비스 연계활동을 강조함³⁴⁾.
- 또한 독서공간이자 지역단위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으로 지역 내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서활동 외에도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기여함.
-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어, 중앙도서관과 같이 큰 도서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2004년 정부에서는 ‘문화비전 21; 창의한국’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확충 운동을 제시하였고, 2006년에 국립중앙도서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작은도서관 진흥팀”이 신설되면서 작은도서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됨³⁵⁾.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약 6,000여 개가 개관되어 있음.
- 전국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및 컨설팅, 협력과 교류를 위하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설립되었고, 작은도서관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연구, 기본장서 연구,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지역주

34) 김수연(2017),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35) 윤소영 외(201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진흥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제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명확한 법 제도 아래 지원받고 있음.
- 사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이 완료되면 명칭에 반드시 “작은도서관”을 표기 및 로고를 사용해야 함. 또한, 국비지원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10년 이상의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전에 폐관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함.

〈표 46〉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내역

구분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조성실적 (개관)	25	58	72	69	61	68	60	55	52	36	32	31	18	637
예산액 (억 원)	25	36.5	50	48.5	35	33.8	34.2	28.5	28.5	20	20	17.2	10.8	388
예산지원	복권기금			문예	일반							지역발전 특별회계		

출처: 2017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계획(문화체육관광부)

4.2. 프로그램 운영현황

- 작은도서관에서는 독서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를 이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함.
- 일반 문화프로그램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어, 중앙도서관과 같이 큰 도서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소소한 즐거움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표 4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례

구분	도서관	운영주체	특성화 프로그램	내용
서울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북촌인심 협동조합	<p>[생태·역사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나는 역사교실 · 대상: 초등 2,3학년 · 내용: 우리 역사이야기를 듣고 북 아트를 하고 북 아트 활동 진행 -숲에서 놀자 · 대상: 초등 저학년 · 내용: 체험장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풀,꽃,나무 관찰 -보태니컬 아트 세밀화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공원 내 매점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진 공간 -3,000권의 책으로 시작하여 현재 7,300여 권 보유(2018년 기준) -건물과 인테리어를 나무로 제작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조성 -북 카페형 작은도서관으로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함으로 숲 속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대폭 축소
	동물전문 큰큰도서관	사단법인 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	<p>[주요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돌복스 생명토크: 동물 관련 주제토론을 선정하고 해당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진행 -고돌씨네 생명극장: 동물 관련 사진전, 삽화전, 영화관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에 개관한 국내최초의 동물 전문도서관 -생명존중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북콘서트 등을 진행 -유기견 고양이 두 마리가 도서관의 마스코트로 활동
경기 광명	꿈크리 작은도서관		<p>[세대공감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한 꽃꽂이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개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 공간의 장 마련 -다양한 세대 안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역할 수행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이로 방학특강 독서프로그램으로 점심제공 -청소년 독서실 운영
부산	금샘마을 작은도서관	마을주민 건립위원회	<p>[생활밀착형 배움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책모임 -단맛 낭독회 -깨롱깨롱: 함께 노래부르며 빛그림으로 책읽기 -수북수북: 동화책을 통해 다양한 감정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개관 -육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이 모여 건립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도서관의 활동 공유 -재정 자립을 위하여 지정후원자 모집, 도서관 자체 수익사업 등 지속적 모색
강릉	문화 작은도서관		<p>[커피 실습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핸드드립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최초 커피특성화 도서관 -커피관련 자료실을 만드는 것에서 특성화를 시작 -전체 보유도서의 30%가 커피관련 도서 -커피 실습 프로그램은 진로 탐색 및 취미개발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의가 큼

구분	도서관	운영주체	특성화 프로그램	내용
충북 청주	작은도서관 홀린	이재복 대표	<p>[사진교육 프로그램]</p> <p>- 사진 걸핼기</p> <p>· 흑백사진부터 디지털사진까지 역사, 촬영기술, 인화까지 체험</p> <p>· 암실작업 중심의 이마고와 디지털중심의 홀린 콜라보레이션 사진교육</p>	<p>- 2014년 개관 이후, 사진공간, 독립출판서점, 핸드드립 카페로 이루어진 복합서점</p> <p>- 책을 판매하던 공간을 책을 공유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p> <p>- 80%의 사진과 20%의 기본적인 인문서적, 독립출판물로 구성</p>

출처: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www.smalllibrary.org)

5. 주요 이슈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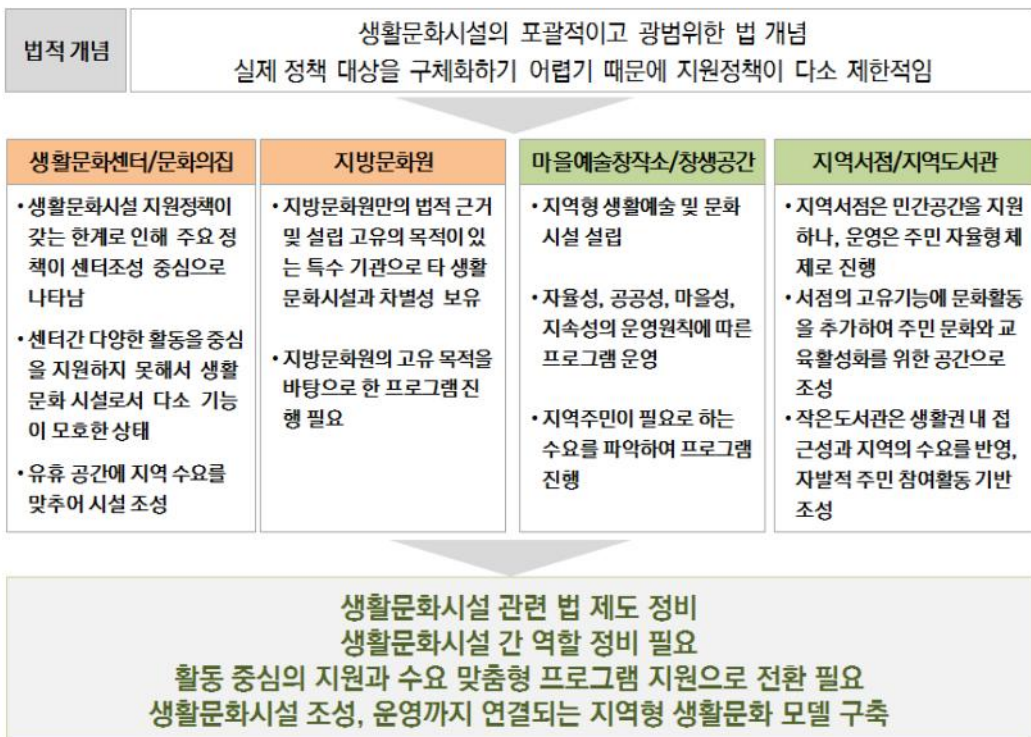
- 서울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됨. 정부에서는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만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운영의 자율성은 지역 주민이 진행하고 있음.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하지만, 지역의 현장 수요에 맞추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획·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경기도 창생공간은 지역여건에 맞추어 대안적인 공간을 조성한 곳으로 생활기술훈을 바탕으로 문화적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가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함. ‘공공성, 자율성’이라는 운영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형 모델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지역서점은 서점의 고유 기능에 여러 문화활동을 진행하여 지역 중소형 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서 주민 문화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간임. 민간주도의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주민자율 운영이라는 개념이 수립되어 있음.
-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독서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주민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역에 특성화된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작은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문화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각 문화시설은 중요시 하는 운영원칙에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형 생활문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제4절 비교분석 이슈 및 시사점

- 제2절에서 지역문화진흥원 현 지원대상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과 제3절에서 생활문화시설 운영에서의 참조사례를 살펴본 결과,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역형 생활문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문체부에서는 생활문화센터 구성과 함께 조성된 다양한 생활문화센터에 맞추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반면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임.
- 그동안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생활문화센터 구성과 운영 지원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을 정책에 포함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책들이 원활하게 환류 되지 못한 것도 다양한 정책 수립에 한계로 작용하였음.
- 이로 인해 문체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생활문화센터들이 운영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생활문화시설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수립되어 있고,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을 범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불명확하여 생활문화센터가 증가했지만, 다른 시설들과의 역할 중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운영참조사례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주민자율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형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는 생활문화시설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생활문화 활동이라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생활문화시설 모델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렇듯 민간에서도 생활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운영에 대한 규정 없이 현장 수요에 맞추어 지역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것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제3의 섹터에서 생활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설, 다양한 활동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장을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포괄하여 확산시킬 필요도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생활문화시설 운영의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에서도 원활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함. 또한 현재와 같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보다 생활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활문화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강화하여 지역형 생활문화시설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10] 지역형 생활문화 모델 구축을 위한 방법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개선방향

제1절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제2절 생활문화 시설에서 활동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제3절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및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

제1절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1.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적 강화

1.1. 생활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활동으로의 정책방향 전환

-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지속적인 이슈를 정리하면, 첫째 생활문화 법률적 개념의 포괄성과 모호함, 둘째 생활문화시설 범주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지원정책 대상의 구체화 어려움, 셋째 생활문화센터의 법적 근거 미비를 들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선 선행연구들은 법률 개정방안 및 법률상의 생활문화시설 범주에서 삭제 혹은 존치 시설 대상을 제시(가령 정광렬, 2016 등)하거나, 생활문화시설 인증제 도입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음(최혜자, 2017).
-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생활문화의 개념 재정립, 생활문화센터의 법적 근거를 강화를 제시함. 또한 생활문화시설 중에서도 고유 기능이 있는 시설을 고려하여, 생활문화시설의 구분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현재 단계는 생활문화시설 정책 추진의 초기단계로, 선부른 생활문화시설의 법적 범주 구분이나 구체화가 자칫 생활문화시설의 다양성과 폭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생활문화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 내에서 실질적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적 강화가 필요하며,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함. 기존의 지원정책은 주로 생활문화센터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방대한 시설에 대한 정책 수립의 명확성을 도출하지 못했음. 따라서 활동 중심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는 시설로 정책적 관점을 변화시켜야 함.

-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규정 없이 열린 개념으로 두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나타나는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즉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파악이 되면, 수요를 충족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만의 생활문화 지원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음.

1.2. 실질적인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안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은 생활문화진흥 및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규정을 명시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법률상 명시된 생활문화의 개념의 광범위함과 모호함, 법이 명시하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주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
- 앞선 선행연구(양건열, 2014; 정광렬, 2016; 최혜자, 2017)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활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법이 포괄하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주가 상당히 광범위하여 지원정책의 대상이 현재에는 생활문화센터에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장관 고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지원정책을 구체화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문화의 집 공간이 리모델링되어 생활문화센터로 조성된 경우는 기존 조례와의 혼선으로 인해 시설운영 및 활동 지원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현안을 반영하여 선행연구에서도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제시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관해서는 우선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생활문화의 정의를 일상적인 참여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강조한 생활문화 정의를 제안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에서 지역문화진흥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음.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현재 법이 포괄하는 생활문화시설 중에서 삭

제되어야 할 시설과 존치해야 할 시설을 제안하였으며, 생활문화활동 중심으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³⁶⁾.

- 현재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의 범주의 구분이나 구체화가 향후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주에 대한 접근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문화진흥이 구체화되고 생활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함.
- 따라서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2장(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시설 중심의 내용에서 생활문화시설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차원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지역단위 ‘생활문화 협력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제안함.
- 생활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이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와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주민자치센터-생활문화센터-주민 커뮤니티 공간-평생학습시설 등 관련 공간/단체 간 협력 기반이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체계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역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표 48> 협력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 예시(안)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실정에 맞는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생활문화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간, 시설과 단체 간 다양한 연계 협력을 통한 생활문화활동을 장려할 의무를 가진다.

협력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문화시설의 조성 및 운영, 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생활문화지원의 구체적인 원칙 수립, 이를 포괄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여하여 생활문화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 ‘생활문화 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생활문화지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포함시킬 수 있음. 예컨대, 지방자치단

36)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체는 지역에 실정에 맞는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간, 시설과 단체 간 다양한 연계 협력을 통한 생활문화활동을 장려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력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문화시설의 조성 및 운영, 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생활문화지원의 구체적인 원칙 수립, 이를 포괄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여하여 생활문화진흥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생활문화시설 간의 협력체계 활성화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활문화생태계의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고 현재 법률상에서 생활문화시설에 포함되는 문화시설들이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과 활동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1.3.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 운영 원칙에 대한 구체적 명시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은 시설 건립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음.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의 내용은 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항 외에 시설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조례 제정을 통한 구체화를 장려하고 있음.

〈표 49〉 생활문화 지원 및 시설운영 원칙 관련 조항 예시(안)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 운영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실정에 맞는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지원정책 추진 및 생활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원칙은 지역단위 생활문화 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하여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 현재 생활문화시설 범위의 광범위함, 생활문화시설 간의 역할 혼재 등의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지원을 넘어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문화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미 조성된 일부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생활문화동

아리의 공간 수요가 있을 시에만 운영되고 등 운영원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조성될 경우 생활문화시설로서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행연구(최혜자, 2017)에서 생활문화시설의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을 다뤘지만 이미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인증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한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적으로 생활문화시설은 생활문화의 법률적 정의에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활문화 활동의 일상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 운영의 일상성과 개방성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생활문화시설의 조성뿐만 아니라 조성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을 법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 지원 및 시설 운영 원칙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생활문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

〈표 50〉 생활문화 지원 및 시설 운영의 원칙의 주요 내용

운영 원칙	주요 내용
일상성 및 개방성	-생활문화시설은 생활문화활동의 일상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상시 개방하여 운영
자율성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운영
공공성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 형태 운영
소통성	-지역주민이 모여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지속성	-지원사업이 종료되어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운영
환원성	-생활문화 활동의 결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운영

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1. 지역 단위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표준조례> 모델 구축

- 2018년 5월 기준, 32개 지자체에서 생활문화와 관련된 조례 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보다 큰 차원에서 생활문화진흥,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정한 경우는 서울, 부산 등 11개 지자체에 불과함. 이러한 현상은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현 주소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에 관한 조례 제정 또한 보다 종합적인 차원의 내용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생활문화진흥에 중점을 둔 지역 단위 표준조례 모델 구축하여, 지자체에게 조례 제정 시 참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생활문화진흥 조례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문화진흥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사업 지원의 원칙과 기준, 생활문화 협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하여, 지역에서 조례 제정 시에 참고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역단위 표준조례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1〉 생활문화진흥 표준조례 주요 내용(안)

조례	조례의 주요 내용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혹은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 생활문화시설 및 단체 관련 정의 제3조.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사항 제4조. 생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의무 제5조. 생활문화사업의 지원 원칙 제6조.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의 원칙 제7조. 생활문화 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의 원칙 제8조. 생활문화진흥 환류체계 수립

- 지역단위 생활문화진흥 표준조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현안

과 수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큰 차원에서 생활문화진흥의 방향성의 명시와 더불어 차별되고 다양한 지역의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자율적인 세부사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2. 중앙 차원의 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 추진 제언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통계 기반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이 유일하며 법에서 명시하는 생활문화시설 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6개 시설이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포함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생활문화시설로서 조성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고시에 명시된 시설을 포함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통계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통계관리 체계에 있어서 나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신규로 발생하는 문화시설을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음. 예컨대 문화의집은 수년간 통계가 축적되지 못하다 최근에 다시 집계에 포함되거나 미등록 박물관, 미술관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통계관리 체계의 보완과 더불어, 생활문화시설 통계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추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지자체 공무원 또는 해당시설 협회에 의한 보고통계 형태로 통계 보고 방식을 전산화하여 보다 신속성, 정확성을 추구해야 함.
- 생활문화시설의 통계관리는 시설에 대한 주요 현황 및 인력구성 정보, 예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각 시설 간 통계의 기준을 통일하여 종합적인 생활문화시설의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간 활동 현황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계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표 52〉 전국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 제안

-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생활문화시설 범위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시설을 포함한 생활문화시설 통계 추가 필요
- 보고통계 방식에서 시스템에 의한 전산입력 방식으로 전환
- 시설에 대한 주요 현황/정보 체계적 관리 및 통계의 기준 통일: 개소에 대한 정보, 인력 및 전문인력, 예산, 프로그램, 이용자 등의 구체적인 항목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법 제정

□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2개 지자체에서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 생활문화 관련 정책적 인식이 부족함. 법으로 정한 의무지만, 제정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임³⁷⁾.
- 이러한 측면에서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생활문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이 필요함.
- 향후에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정책의 프레임에 속하지 않는 시설, 예를 들어 지역서점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도 필요함.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활동은 점차 다양해지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활문화센터라는 측면으로 한정되면,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임.

□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법(가칭)>의 지향점

- 따라서 (가칭)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함. 이 법은 문화자치, 문화민주주의 발현에 지향가치를 둔 생활문화 지원법이 되어야 함. 현행 지역문화진흥법 내 포함된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 지원 개념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함.

〈표 53〉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법의 지향점

구분	주요 내용
개념 정의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 개념의 구체화
주민 주도	문화 민주주의에서 문화 당사자 주의로 가치 실현
정부/지자체 역할론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지역의 자율적 모델 개발 유도 및 확산의 근거

37) 내일신문(2016.06.17.), 지자체들 ‘말로만 문화진흥’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199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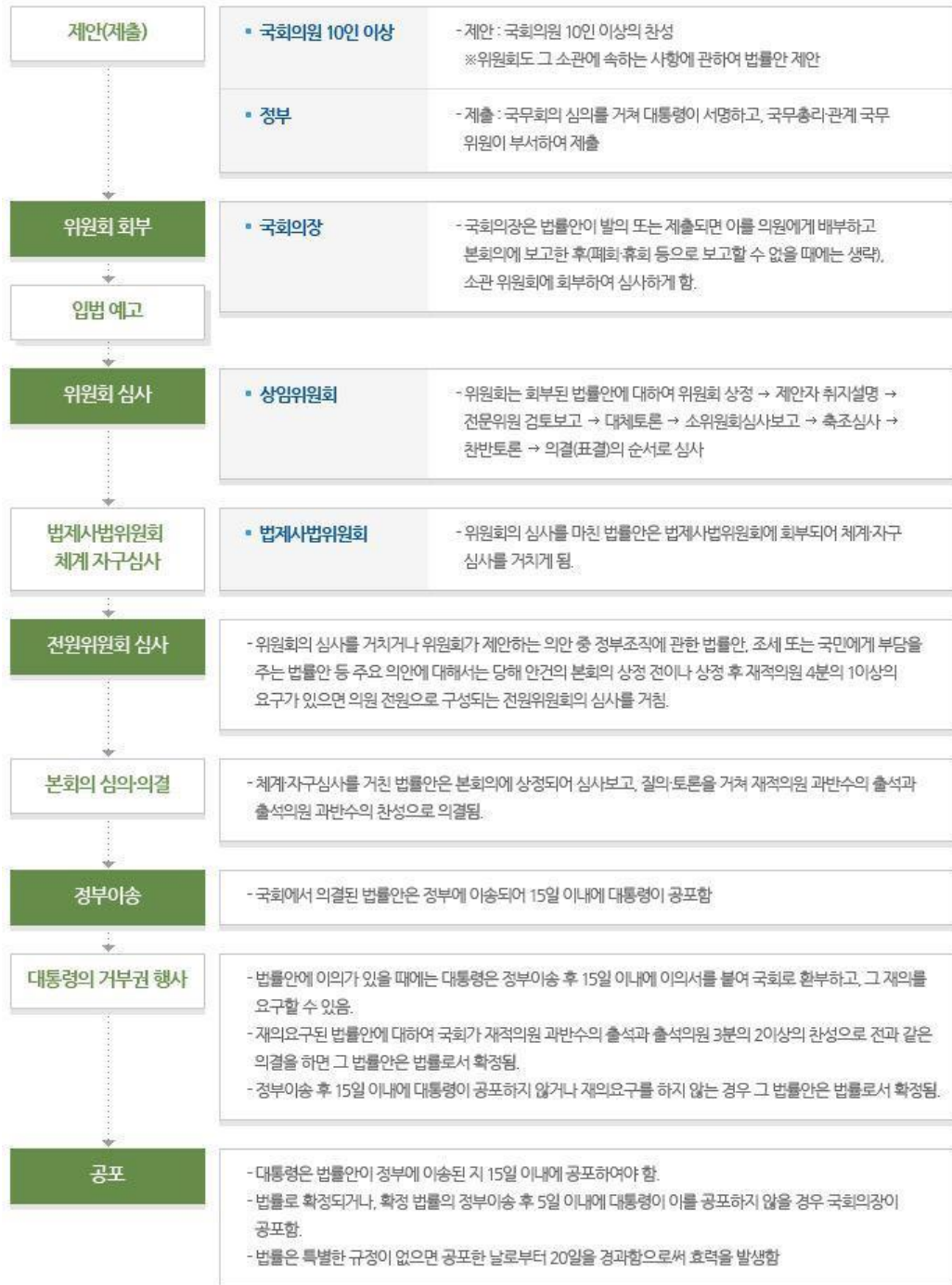
- 또한 주민 주도(민간 주도) 활동을 통해 문화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문화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함. 문화 민주주의 가치는 향후 문화 향유가 모든 계층에 소외 없이 나타나야하고,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문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그러나 현재 주민 주도로 나타나는 문화 공동체의 형태들은 다소 관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됨.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공동체들은 “문화 당사자 주의”를 채택하여 직접 이해관계인 당사자들이 이끌어가고 참여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였음.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시설 규정이나 센터에 대한 시설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문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정과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즉, 생활문화시설 규정, 시설에 대한 내용에 덧붙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원칙과 지원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의 자율적 모델 개발을 유도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작용해야 함.

□ 법률 제정의 절차 및 사회적 합의 필요

- 하나의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의 경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부 입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함. 그 이후 상임위 심사, 본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함.
- 이보다 사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은 전문연구기관이나 정책추진팀에 의한 조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안의 조문화 작업이 필요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며 법률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함.
-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친 의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안 필요성에 대해서 범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음. 예를 들어 여야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법률안 의결을 미룰 경우,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되기도 함.

- 따라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법의 제정과 시행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혼재된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지원체계 구축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책추진팀을 신설하고 법령안 제정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비전 및 법률안을 마련해야 함.

[그림 11] 법률안 처리과정



출처: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제2절 생활문화 시설에서 활동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1.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구체화

1.1. 생활문화센터 중심의 지원정책 구체화

- 현재 법령 상 생활문화시설에는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이른바 예술관련 문화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시설들은 잠재적으로 생활문화시설로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생활문화시설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공간만 활용하게 되는 경우 생활문화시설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법률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려면, 생활문화시설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고 실제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나타나는 일상의 공간이어야 함.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나타나는 공간이어야 함.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은 생활문화 활동이라기 보단 관람행위에만 머무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규정에 따른 광범위한 생활문화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은 실무적 측면에서 무의미하므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현실적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함.
- 현 시점에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은, 지원대상의 범주 구체화로 접근하는 것보다 시설 조성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활동 활성화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우선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문화 활동에 중심을 둔 명확한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를 필두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현 단계에서 봤을 때,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은 생활문화 정책 안에서 생활문화시설로 고려되어 조성된 생활문화 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정책추진의 대상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변화된 정책

결과가 축적되면서 차차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의집, 문화원도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문화의집과 지방문화원이 아니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된 시설에만 해당되므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설지원정책으로 명료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시설조정보다는 생활문화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지방문화원은 정체성과 핵심활동 기반이 생활문화시설에 가깝기 보단 향토문화 보존 및 지역문화 활성화 등의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방문화원의 고유기능과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함.

□ 단기적 측면의 지원정책 구체화

- 단기적 측면에서는 현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대상인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을 고려할 수 있음. 왜냐하면 이 세 시설은 생활문화시설 정책 초기부터, 주요한 생활문화시설로서 고려되어 왔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임.
- 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며, 동호회 양성, 프로그램 지원, 동호회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설로서 활용되고 있음. 생활문화센터는 이미 142개소로 전국적으로 일정한 양이 조성되고 있으며, 시설의 확장보다는 생활문화센터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활문화 활동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함.
- 문화의집은 강좌 중심의 운영에서 주민 주도형 문화활동으로 활동 전환을 통해 생활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주도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와 미션 및 운영목적이 유사함. 따라서 문화의집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확장해가는 지원대상으로서 정책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방문화원은 정체성과 핵심활동 기반이 생활문화시설에 가깝기 보단 향토문화 보존 등의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유 기능에 집중하는 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수적으로 생활문화기능이 있는 부분은 생활문화시설로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장기적 측면의 지원정책 구체화

- 우선 생활문화시설 지원의 다양한 형태와 다각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을 포괄하고, 각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방식과 영역별로 범주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 지원 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임. 현재 규정의 재정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나타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수행함.
-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생활문화의 패턴이 나올 수 있고, 이들이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 가령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서점이나 추후 유희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문화공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지원사업의 경우 각 시설에 대한 개별사업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형 생활문화시설 모델을 수립하고, 이 모델을 통한 지원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향후 각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시설들이 네트워크 되도록 지원하고,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토대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표 54〉 생활문화시설 지원대상 범위의 변화

현행	단기적 측면	장기적 측면
5만 2천여 개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생활문화시설 지원사업이 적용된 시설을 중심으로 구체화 - 현재 정책 실행의 질적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섹터 등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이 나타나는 시설을 포함 - 생활문화의 미래지향적 가치 추구

1.2. 지역의 자율적으로 생성된 문화공간과의 연계 방안 마련

- 지역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지역문화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조성지원한 생활문화센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생활문화시설이 등장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참조한 서울마을예술창작소, 경기창생공간 등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음. 2018년 인천광역시도 ‘천개의 문화 오

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 및 일상공간을 시민들의 생활문화시설로 조성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적 생활문화시설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생활문화시설 등과도 연계방안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이미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와 실제로 생활문화활동이 일어나는 여러 문화공간 등과도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향후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시설 조성을 넘어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문화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새롭게 지역별로 생성되는 다양한 생활문화공간들과의 연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내 문화공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내 문화공간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각 문화공간의 성격 및 환경을 이해하게 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또한 작품의 기획, 전시, 공연 등의 활동을 문화공간을 순환하면서 진행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유휴공간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러한 실질적 문화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은 아직 미흡함. 특히 지역별로 시민들의 생활권역이나 생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문화수요를 전제하고 표준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은 향후 점차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를 위해서 지역의 생활문화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정책을 개발해야 함.
-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 및 활성화 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야함.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생활문화시설로 포함해야 함. 그리고 보다 다양한 사례가 확산되고 다른 지역과 교류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지역 차원에서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고, 진흥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개발을 위

한 자료로 활용해야 함. 이를 통한 지역 중심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생활문화 정책 수립 및 실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보구축 및 의견수렴 창구 설치

- 전국에 조성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외 지역에 생성되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들과의 연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시설 관련 제반의 정보수집 및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등이 설치될 필요가 있음.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 생활문화시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전국의 다양한 생활문화 관련 소식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과 활동이 나타나는 문화공간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함. 관련 정보를 일정한 체계로 범주화시켜 유사한 활동들이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또한 문화공간과 연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여 문화공간 연계에 활용함.
- 다양한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전문가들, 지역 생활문화시설에서 공유가 가능하게 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간 동호회 교류, 행사 지원, 시설 간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게 하여 생활문화가 일상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함.
-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집 근처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생활문화시설을 검색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서비스(통합정보 제공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를 제공함.
- 한편,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통합홍보 및 통합로고를 활용하면, 보다 넓게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홍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³⁸⁾. 아울러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생산된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유 및 확산을 도모해야 함.

38) 양혜원(2014), 앞의 글.

2.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가이드 구축

2.1. 생활문화활동 중심 지원정책의 구체적 전략 수립

□ 생활권 개념 도입을 통한 정책지원의 목표치 설정과 지원 근거 마련

- 생활권은 크게 주거, 경제활동, 여가활동을 묶은 개념이라 볼 수 있음. 각 단위의 정성적, 정량적 측면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생활권 지역의 여건을 파악하여 생활문화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취약지역 우선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되, 그 법을 근거로 지역에서는 자체 버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적 고민들이 담겨서 지역 수요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들은 지역의 고민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하고 있음. 생활문화시설들은 지역에 설립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은 생활문화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임. 이에 생활권 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량, 정성적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단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역별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 및 활동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음. 기존의 한 개의 센터 혹은 센터의 활동에 국한된 컨설팅이 아닌 생활권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간 연계를 비롯한 종합적 관점의 컨설팅 추진이 필요함.
- 이러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만,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임.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문화시설들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컨설팅으로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컨설팅 방식은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기존의 컨설팅 사례를 다양한 범주로

재구성을 하고, 컨설팅 전문가 풀을 확장하여, 상시적인 맞춤형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예를 들어 컨설팅을 추진할 때, 기존 사례별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과정,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컨설팅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현장 답사 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생활문화 활동 중심의 지원

- 생활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물리적 시설 기준으로 기존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을 양분화하면 지원정책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시설 구분에 따른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에 제한된 운영프로그램으로만 접근되고 생활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다양한 방식의 생활문화활동 지원으로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차원이 아닌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중심의 지원이 필요함. 생활권역 단위 개념들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문화활동 중심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 운영방식을 지역의 자율적 권한으로 부여하게 되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역분권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음. 그동안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이 센터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지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었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활동들을 장려하지 못하기도 했음.
-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정책은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화를 넘어서서,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 생활문화 활동 중심의 활성화 지원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해야 함.

□ 지원정책의 원칙 수립

- 서울의 마을예술창작소, 경기 창생공간 등이 정책추진에서 활동의 목표로 공공성 및 자율성 등과 같은 지원의 원칙을 수립한 것과 같이 생활문화 활동중심의 지원을 위한 원칙을 구체화해야 함. 이를 위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시설 지원 원칙(안)을 ‘자율성’, ‘공공성’, ‘소통성’, ‘지속성’, ‘환원성’ 등 다섯 가지로 개념화함.

〈표 5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시설 지원 원칙(안)

개념	주요 내용
자율성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운영
공공성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 형태 운영
소통성	지역주민이 모여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지속성	지원사업이 종료되어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운영
환원성	생활문화 활동의 결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운영

- 기존의 생활문화시설 지원 활성화 정책에서는 주민들의 수요와 자발성 등을 프로그램으로 담아야 함을 강조하지만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측면이 강했음. 향후에는 생활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이 생활문화정책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문화 활동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함.

2.2. 상향식 자율적 프로그램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 자율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자유공모 방식의 도입

- 지역 수요가 반영된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지원에서 자율공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자율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해나가고, 어떠한 측면의 지원사업이 필요한지를 수요자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음. 자유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프로그램 지원의 기반 마련을 모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영상미디어센터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전국미디어센터 영상문화 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은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음. 서울영상미디어센터는 자율공모를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는 조건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수행하고 싶은 사업을 역으로 제안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주민 중심 운영의 가이드 라인 모색

- 생활문화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자발적인 참여

를 통해 나타나야 함. 생활문화시설 역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 기반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설립의 이유임.

-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변질되기도 함. 이를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생활문화시설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함.

□ 민간주도 거버넌스 운영방식 구축

- 생활문화활동의 본질은 주민의 주체적 문화수요를 자율적으로 발현하고 구현해가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발견하고 생활문화활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민간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가는 것임.
- 그러나 실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민 자율, 민간이라는 틀을 사용하지만 관료화된 경우도 있고, 단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민원수리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활동의 본질을 살리는 실질적 민간주도 거버넌스 운영 방식이 필요함.
- 생활문화시설 운영에서 전문인력을 꾸려서 운영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직영을 하거나 민간조직이 위탁하는 운영형태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운영형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영형태이든 생활문화활동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민간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생활문화활동 관련 전문가나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함. 생활문화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나 활동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주체성을 발현하게 하고,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됨. 생활문화활동에 대한 선택지를 다양하게 넓힐 수 있도록 전문가나 활동가는 조언, 컨설팅 등을 통해 도움을 주지만 최종 결정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활동 형성과 성장에 따른 단계별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등을 비롯한 지역별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형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예를 들어 생활

문화동호회 지원 프로그램도 미형성 단계에서 미흡한 수준의 형성단계, 심화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할 수 있음³⁹⁾.

- 지역 내에 문화동호회 등 지역문화활동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유발한 요인이 필요함. 따라서 상주예술단체나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친밀도와 자발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선호, 자기개발 욕구는 강하나 지역공동체 기반과 지향성이 취약한 경우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활동 공간 제공과 함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사 및 프로그램 연계, 발표 공간 제공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해야 함.

□ 생활문화시설 조성 및 활성화 전반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 강화

- 생활문화가 지역문화의 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면, 생활문화는 지역으로 깊게 침투하고 지역단위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이나 활동에 대한 규정 없이, 열린 개념으로 두고 지역 자율에 넘겨주어 지역의 생활문화수요에 대응해서 지역 자체 프로세스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생활문화 개념, 프로그램 시설 등의 제반 사항을 지역 현장 수요에 맞게끔 지역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임. 즉 그 지역의 생활문화 수요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에 맞게 넘겨주고, 시설과 활동에 대한 개념 규정을 아예 안 하는 접근 방법임.
- 지역이 자율적으로 생활문화공간에 대한 개념부터 활동내용, 시설 구성, 운영규정 등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구축하고, 지원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현실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39) 양혜원(2014),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3절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및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

1. 지역분권 및 자치 흐름에 맞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

-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더해지면서 지역분권과 자치로의 전환은 이제 지역문화환경의 주요한 여건이 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이나 활동 및 인력지원 등 기존의 목적형 지원방식은 지역별로 차별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수요와 현장의 이슈를 반영한 지원이 어려운 구조임.
- 지역 분권화 시대 지역 및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생활문화와 지역 문화를 자리 잡게 해야 함.

1.1. 지역 중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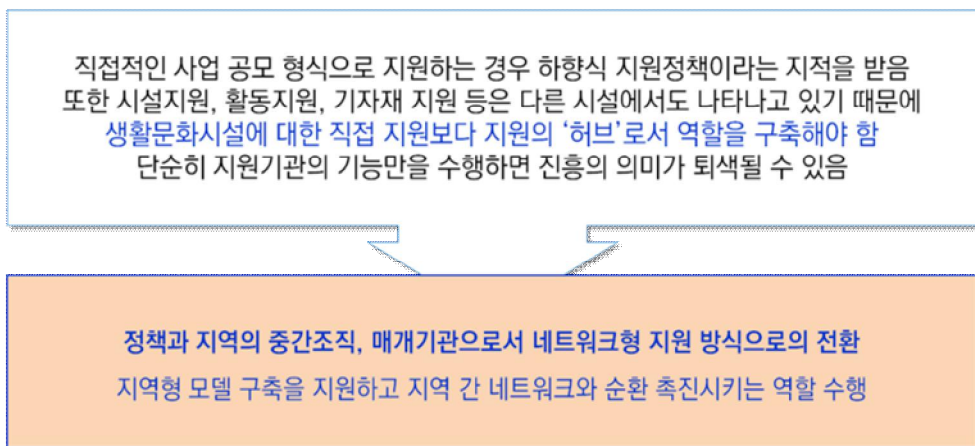
□ 지역 생활문화를 네트워킹하는 매개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현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강력한 재정 자립을 전제로 하며, 더불어 문화자치를 실현하도록 시·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지역분권, 문화자치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 구현되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지역 간 정책추진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실질적인 중앙-지역 협치 기반을 구축해갈 수 있음. 하지만 아직은 중앙집권적, 하향식, 행정 중심의 사업체계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분권과 자치기반 구축의 편차가 있어 실제 지역 중심의 정책기반을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지역분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 따라 생활문화사업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민들의 자율적 생활문화 활

동은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들을 정책적으로 매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생활문화시설과 활동을 전달하는 관점을 넘어 지역의 생활문화활동 및 시설을 네트워킹하는 매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에 나타나는 생활문화활동 및 시설 간 교류와 협력 등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분권 환경에 필요한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문화진흥원은 사업수행 중심조직에서 정책조정과 지원 조직으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하향식 지원방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정부의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생활문화진흥원에서 명칭까지 변경한 지역문화진흥원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역문화 및 지역의 수요와 더욱 밀착된 연계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분권의 흐름에 맞추어 정책과 지역의 중간조직이자 매개기관으로서 네트워크형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나아가 지역형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와 순환을 촉진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그림 12] 지역문화진흥원의 새로운 지원방식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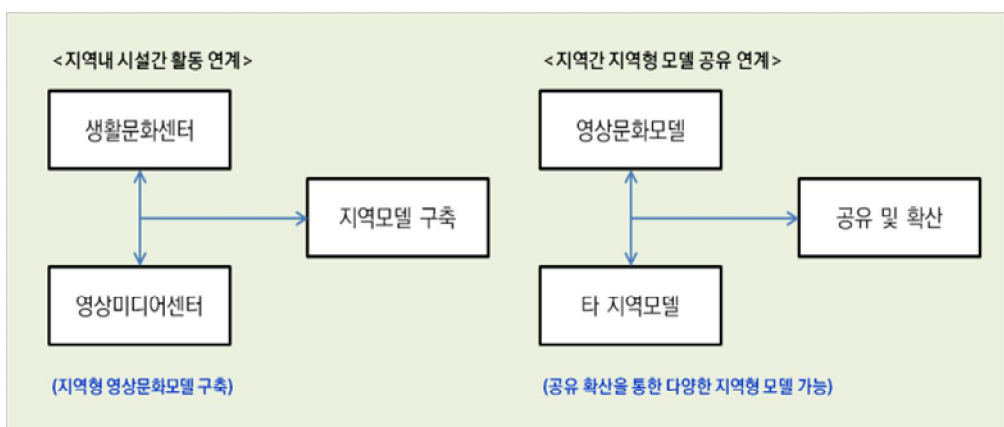


1.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허브로서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 구체화

□ 생활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모델의 허브

- 지역분권화 환경 속에서 향후 지역문화진흥원들은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생활문화활동 중심으로 생활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공공성과 지역 자율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 스스로 지역의 수요와 여건, 특성에 맞는 특화된 지역별 지원 모델을 구축이 필요함.
- 이 경우 공간의 조성에서부터 운영 및 활동의 원칙 수립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지역이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형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협력자와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이를 통해 지역형 모델 구축을 위한 지원, 지역과 지역의 연계를 통한 지역형 모델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이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현장과 보다 밀착되어 각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특화된 지역형 모델 구축을 지원하며, 지역 간 네트워크 및 협력 지원을 통해 지역형 모델의 공유 및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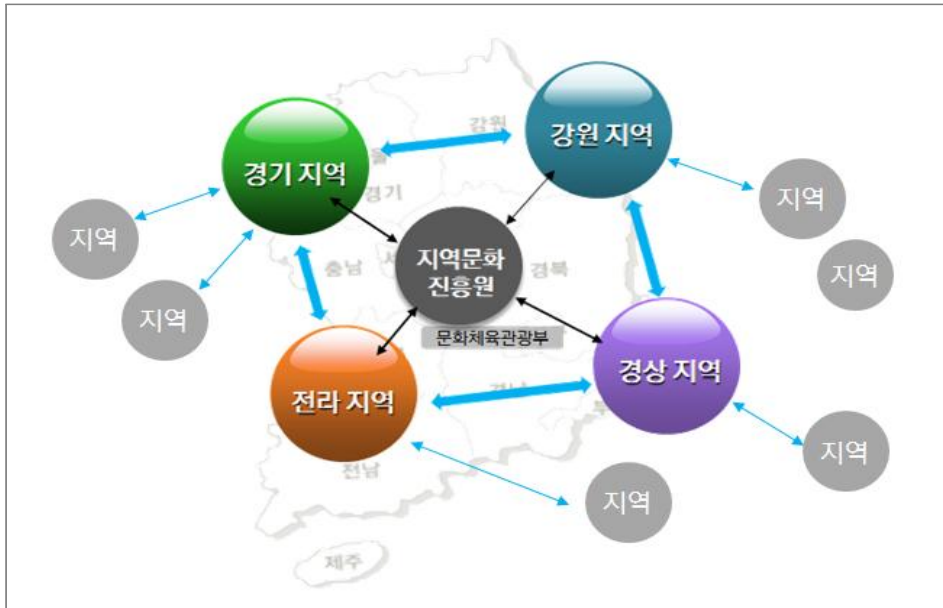
[그림 13] 지역내 시설 연계에서 지역 간 모델 공유를 위한
정책허브로서 네트워크 구축 예시



-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모델의 허브로서 지역 내 시설 연계에서 지역 간 모델 공유를 통해 진흥원의 연계기능이

강화되고 확장되면 보다 큰 지역 매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아래와 같이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 매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생활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14] 확장된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 매개 모델(안)



□ 생활문화시설 정책기관으로 명확한 역할 수행

- 중앙정부에서 생활문화 정책 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고, 생활문화센터 구성과 함께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이관하여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은 기존 생활문화시설과의 연계, 운영인력 및 예산, 생활문화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에서 그 기능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⁴⁰⁾.
- 지역분권화에 따라 지원방식이 전환한다 하더라도 정책적 역할이 불분명한 관계 속에서는 결국 국가 단위의 계획에 맞춰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

40) 정광렬 외(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음. 지역분권 흐름에 맞는 추진체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 정책 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 설정이 중요함.

- 지역의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역 간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조정 및 지원 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분권, 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3. 지역형 모델 구축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역할 구체화

- 지역중심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이 구축되면,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역할 구체화와 함께 실제 생활문화 활동이 나타나는 생활문화센터의 역할도 구체화 되어야 함. 왜냐하면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이 구체화되거나 강화되지 못하면 정책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생활문화센터는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정책 자체가 전달되는 창구로서 기능하면서, 동시에 실제 생활문화가 나타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 그러나 단순히 공간의 기능적 측면에서 역할을 정립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유사한 생활문화시설들(가령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등)과 변별점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모색해야 함.
- 즉 생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역할을 정립하면 다른 시설들과 변별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생활문화(활동)를 지원하는 시설로서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것임. 전자와 후자가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공간 사용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방향성 설정, 구체적 역할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이러한 설정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진흥원에서 지역형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시설들 간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고, 센터는 생활문화 정책의 최전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요, 활동 등을 진흥원으로 전달할 수 있음.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모델 구축 지원 및 확산

2.1. 생활문화시설 및 주체 간 협치 모델 구축 지원

□ 생활권 중심의 생활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 생활권 중심의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의집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중복문제를 해소하거나 프로그램 교환 또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인원으로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생활권 내 관련 시설의 실무자 간 상설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생활문화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생활문화 강사 및 행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생활권별 공동의 생활문화 행사 총괄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 전문가 양성 및 활용

- 생활문화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문화활동을 매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생활문화센터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외에 별도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없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되어 지역별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지역문화 전문인력 속에서 생활문화 관련 인력이 양성될 수도 있지만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생활문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구현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지만⁴¹⁾,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커리큘럼을 보완하여 생활문화 분야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보다 종합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한 뒤, 공통 핵심역량과 특화역량을 구분하여 공통 교육과정과 별도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생활문화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문화기획 보다는 자원개발, 네트워킹, 코칭, 갈등 해결, 교류 등과 관련됨.

41) 정광렬(2016), 앞의 글.

- 이를 위해서 이론적인 교육 외에도 사례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이렇게 양성된 전문가를 생활문화시설 운영 및 활성화는 물론이고 각 시설 및 주체들 간 협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2.2. 지역형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 프로그램 운영

□ 지역형 모델의 구축 및 확산

- 지역에서 운영되는 생활문화시설이 다양한 모델로 구축되는 것은 문화다양성 차원에서나, 지역분권 정책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함. 정부의 지원정책 틀을 모범적으로 만들어가는 모델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생활문화활동과 시설이 생성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다양한 지역형 생활문화활동 및 시설의 모델들이 나타나게 하고, 서로 공유하게 하는 것이 중앙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역할이고, 이를 매개하고 다시 정책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임.
-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본격화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그동안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사업에 초점을 둔 반면, 프로그램예산 등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전담인력 부족과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아리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상황임⁴²⁾임이 제시된 바가 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움. 또한 지역마다의 구체적 상황이 다르고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모델을 지역 자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따라서 지역 생활문화시설들이 네트워크 되도록 도와주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가지고 지원 트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며, 직접 지원의 효과도 있음⁴³⁾.

42) 고정민 외(2016),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43)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를 위해서 지역별 네트워크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면서 일정한 자체 활동과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생활문화 활동의 속성에 부합하는 지원방식을 모색하는 방안이기도 하며, 활동주체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정부가 지원내용과 형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함.

□ 지역협력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 지역형 생활문화 활동 및 시설의 다양한 모델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관련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고,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 현장 수요에 맞춘 운영이 진행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에 의한 지역형 생활문화 모델 구축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15] 지역형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방안



- 지역협력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수요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구체적인 사례 공유 및 담론 형성을 위한 지역순환 세미나 운영, 지역형 모델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함.

- 지역협력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의견수렴 및 논의, 기획과 실행 자체가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형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역협력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자율적 운영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통해 개발된 지역형 모델이 지역으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5장

연구결과 종합 및 후속연구 제안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후속연구 제안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 생활문화시설 조성 중심의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현 주소

1.1. 생활문화시설 개념의 포괄성

- 생활문화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평생교육법,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차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적 시설을 포괄하게 되었으며 범위가 광범위함. 또한 2018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서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생활문화시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범주가 나타날 수 있음.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범주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단계는 생활문화시설 정책 추진의 초기단계로, 선부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주를 구분이나 구체화가 자칫 생활문화시설의 다양성과 폭넓게 펼쳐질 수 있는 생활문화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때문에 생활문화시설 중심이 아니라 생활문화활동 중심의 생활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1.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현황 및 지원정책 추진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으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문체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진흥계획에는 생활문화 진흥관련 사항 및 생활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문체부가 수립한 ‘생활문화 진흥’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과 ‘지역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로 나누어짐. 각각의 지원내용은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며, 문체부 산하 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실행되고 있음. 2018년 현재 생활문화 진흥은 세부내용 중에서 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지역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로 추진되고 있음.

- 한편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더불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들임.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체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문체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시행계획에 생활문화 진흥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뿐만 아니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데, 강제성이 없고 특별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에 미온적이었음. 이로 인해 문체부의 기본계획은 사업별로 실시되지만, 지자체의 시행계획은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자체별로 상이한 생활문화 관련 조례

- 각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 또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등에 근거해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 및 기초 지자체에서 생활문화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총 32 곳으로 나타나고 있음(2018년 5월 16일 기준).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이후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활문화 정책이 중앙단위에서 수립되어도 지자체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문화 정책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일부 지자체는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일

부 지자체는 생활문화센터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각 조례 간 내용이 상이하고 추진되는 정책의 기초, 목표, 방법 등이 상이해서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크게 문체부와 지자체의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음. 위에 언급한 것처럼, 문체부와 지자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함.
- 이와 같은 생활문화시설 정책추진 체계는 한 축으로는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축으로 설명할 수 있음.

〈표 56〉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정책 추진 체계

구분	정책	수행 주체
문체부	기본계획 수립	지역문화진흥원 수행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조례제정	자체 수행

-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수립된 시행계획, 조례 등 생활문화시설 정책 현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어떠한 정책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은 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로 생활문화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그 결과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생활문화센터 구성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활성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법률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도 적절한 정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임.

1.3.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이슈 및 시사점

□ 생활문화시설 법적 범위의 포괄성에 비해서 지원정책 대상은 한정적

- 생활문화시설을 정의하는 법적 개념이 광의의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음. 따라서 광범위한 생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내 여러 생활문화시설이 지원정책 대상이 되어야 함.
- 그러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지원정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던 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대상은 비교적 소수의 생활문화시설로 제한적이었음. 이는 문체부와 진흥원의 한계라기 보단 관련법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생활문화센터 중심의 초기단계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은 별도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센터 운영활성화에 중점을 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정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초기단계임.
- 정부는 국정과제로 생활문화정책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을 3,080개로(2017년 기준 2,657개) 증가시킨다는 정책을 수립함. 문화시설들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으로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시설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어려움.
- 또한 지자체의 경우 생활문화시설 지원관련 정책 수립이나 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센터 조성과 운영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물론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관련한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성과의 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을 지원정책으로 포괄하고, 지자체와 연계를 통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법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만들어 내는

지원정책이나 생활문화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즉, 잠재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정책수립으로 구체적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지자체 지원정책 수립 및 문체부와의 환류체계 구축 필요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수립 주체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시행계획 및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수립함.
- 현재 정책추진체계로 보면, 생활문화센터 구성과 운영활성화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나머지 포괄적 시설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임. 즉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센터로만 정책추진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추진체계는 지자체에서 구축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문체부와 협의할 수 있는 소통 및 환류체계로 연결해야 함. 이러한 프로세스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야 하지만,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유인책이 필요함.
- 문체부의 경우 환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요청해야 함. 문체부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는 넓게 있지만, 실제로는 넓은 범위에 대한 지원정책을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지역 중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로의 전환 필요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생활문화진흥 정책이 추진된 지역 약 4년이 시간이 경과하였음. 전반적인 사업이 지역의 수요 파악을 우선하기보다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현황, 운영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역분권과 문화자치로의 지역문화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지역

수요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생활문화 정책 추진체계는 중앙차원의 문체부와 진흥원의 추진체계가 있고, 지자체의 추진체계가 작동되고 있지만 지역의 경우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책추진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즉, 중앙의 문체부 체계와 지역의 지자체 체계가 구축되고 이러한 체계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체계가 구체화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어야 지역의 수요 반영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음.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는 양적 성과의 질적 전환이 필요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주로 문체부의 정책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업무로만 나타나는 한계 속에서도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통해 2018년 1월 기준 전국 142개의 센터를 조성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음.
- 이러한 성과가 생활문화센터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생활문화시설들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적 확산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체부와 지자체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생활문화시설 개선방향 요약

2.1.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적 강화

□ 생활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활동으로의 정책방향 전환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지속적인 이슈 중 하나는 생활문화센터의 법적 근거 미비임. 그런데 현재 단계는 생활문화시설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로, 선부른 생활문화시설의 법적인 범주 구분이나 구체화가 자칫 생활문화시설의 다양성과 폭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생활문화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 내에서 실질적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적 강화가 필요하며,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함. 기존의 지원정책은 주로 생활문화센터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방대한 시설에 대한 정책 수립의 명확성을 도출하지 못했음. 따라서 활동 중심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는 시설로 정책적 관점을 변화시켜야 함.

□ 실질적인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안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2장(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시설 중심의 내용에서 생활문화시설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차원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지역단위 ‘생활문화 협력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제안함.
- 생활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이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와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주민자치센터-생활문화센터-주민 커뮤니티 공간-평생학습시설 등 관련 공간/단체 간 협력 기반이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체계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역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문화 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생활문

화지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포함시킬 수 있음.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실정에 맞는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간, 시설과 단체 간 다양한 연계 협력을 통한 생활문화활동을 장려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 운영 원칙에 대한 구체적 명시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은 시설 건립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음.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의 내용은 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항 외에 시설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조례 제정을 통한 구체화를 장려하고 있음.
- 현재 생활문화시설 범위의 광범위함, 생활문화시설 간의 역할 혼재 등의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지원을 넘어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문화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생활문화시설의 조성뿐만 아니라 조성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을 법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 지원 및 시설 운영 원칙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생활문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

2.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 단위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표준조례> 모델 구축

- 2018년 5월 기준, 32개 지자체에서 생활문화와 관련된 조례 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보다 큰 차원에서 생활문화진흥,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정한 경우는 서울, 부산 등 11개 지자체에 불과함. 이러한 현상은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현 주소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생활문화진흥에 중점을 둔 지역 단위 표준조례 모델 구축하여, 지자체에

게 조례 제정 시 참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생활문화진흥 조례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문화진흥의 기본원칙과 기본 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사업 지원의 원칙과 기준, 생활문화 협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하여, 지역에서 조례 제정 시에 참고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차원의 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 추진 제언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통계관리 체계의 보안과 더불어, 생활문화시설 통계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추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생활문화시설의 통계관리는 시설에 대한 주요 현황 및 인력구성의 정보, 예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각 시설 간 통계의 기준을 통일하여 종합적인 생활문화시설의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간 활동 현황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계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법 제정

-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가칭)생활문화 활성화 지원법을 제정할 수 있음. 이 법은 문화자치, 문화민주주의 발현에 지향 가치를 둔 생활문화 지원법이 되어야 함. 현행 지역문화진흥법 내 포함된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 지원 개념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함.

2.3. 생활문화 시설에서 활동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 생활문화센터 중심의 지원정책 구체화

- 단기적 측면에서는 현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대상인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생활문화센터는 이미 142개소로 전국적으로 일정한 양이 조성되고 있으며, 시설의 확장보다는 생활문화센터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활문

화 활동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함. 문화의집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확장해가는 지원대상으로서 정책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지방문화원은 정체성과 핵심활동 기반이 생활문화시설에 가깝기 보단 향토문화 보존 등의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유 기능에 집중하는 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수적으로 생활문화기능이 있는 부분은 생활문화시설로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장기적 측면에서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의 다양한 형태와 다각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을 포괄하고, 각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방식과 영역별로 범주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이를 위해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 지원 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임. 현재 규정의 재정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나타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수행함.

□ 지역의 자율적으로 생성된 문화공간과의 연계 방안 마련

-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적 생활문화시설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생활문화시설 등과도 연계방안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이미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와 실제로 생활문화활동이 일어나는 여러 문화공간 등과도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향후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시설 조성을 넘어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문화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새롭게 지역별로 생성되는 다양한 생활문화공간들과의 연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권 개념 도입을 통한 정책지원의 목표치 설정과 지원 근거 마련

- 생활권 단위 개념들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문화 활동들이 있다면 목표치를 잡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 생활문화정책이 센터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지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었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활동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지역단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역별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 및 활동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음. 기존의 한 개의 센터 혹은 센터의 활동에 국한된 컨설팅이 아닌 생활권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간 연계를 비롯한 종합적 관점의 컨설팅 추진이 필요함.
- 생활권은 크게 주거, 경제활동, 여가활동을 묶어서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들은 지역의 고민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하고 있음. 따라서 생활권 설정과 그에 대한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는 지역 중심, 생활문화 활동 중심의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역 자율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자유공모 방식의 도입

- 지역 수요가 반영된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지원에서 자율공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자율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해나가고, 어떠한 측면의 지원사업이 필요한지를 수요자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음. 자유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프로그램 지원의 기반 마련을 모색할 수 있음.

□ 민간주도 거버넌스 운영방식 구축

- 생활문화활동의 본질은 주민의 주체적 문화수요를 자율적으로 발현하고 구현해가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발견하고 생활문화활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민간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가는 것임.
- 그러나 실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민 자율, 민간이라는 틀을 사용하지만 관료화된 경우도 있고, 단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민원수리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활동 가치가 변질되기도 함.

□ 생활문화시설 조성 및 활성화 전반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 강화

- 생활문화가 지역문화의 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면, 생활문화는 지역으로 깊게 침투하고 지역단위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생활

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이나 활동에 대한 규정 없이, 열린 개념으로 두고 지역 자율에 넘겨주어 지역의 생활문화수요에 대응해서 지역 자체 프로세스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4.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및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

□ 지역 생활문화를 네트워킹하는 매개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지역문화진흥원은 사업수행 중심조직에서 정책조정과 지원 조직으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하향식 지원방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정부의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생활문화진흥원에서 명칭까지 변경한 지역문화진흥원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역문화 및 지역 수요와 더욱 밀착된 연계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분권의 흐름에 맞추어 정책과 지역의 중간조직이자 매개기관으로서 네트워크형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나아가 지역형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와 순환을 촉진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허브로서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 구체화

- 지역분권화 환경 속에서 향후 지역문화진흥원할은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생활문화활동 중심으로 생활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공공성과 지역 자율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 스스로 지역의 수요와 여건, 특성에 맞는 특화된 지역별 지원 모델을 구축이 필요함.
-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모델의 허브로서 지역 내 시설 연계에서 지역 간 모델 공유를 통해 진흥원의 연계기능이 강화되고 확장되면 보다 큰 지역 매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아래와 같이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 매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생활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 생활문화시설 정책기관으로 명확한 역할 수행

- 지역의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역 간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조정 및 지원 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분권, 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생활문화시설 및 주체 간 협치 모델 구축 지원

- 생활권 중심의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의집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중복문제를 해소하거나 프로그램 교환 또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인원으로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생활권 내 관련 시설의 실무자 간 상설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형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에서 운영되는 생활문화시설이 다양한 모델로 구축되는 것은 문화다양성 차원에서나, 지역분권 정책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함. 정부의 지원정책 틀을 모범적으로 만들어가는 모델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생활문화활동과 시설이 생성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다양한 지역형 생활문화활동 및 시설의 모델들이 나타나게 하고, 서로 공유하게 하는 것이 중앙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역할이고, 이를 매개하고 다시 정책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임.
- 지역 자율에 의한 지역형 생활문화 모델 구축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협력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수요 및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구체적인 사례 공유 및 담론 형성을 위한 지역순환 세미나 운영, 지역형 모델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함.

제2절 후속연구 제안

-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함. 후속연구는 법제도 개선 관련, 표준조례 구축 관련, 통계 관리, 생활문화센터 전문성 관련 연구로 구분됨.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항목별로 제시하였음.

[그림 16] 생활문화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후속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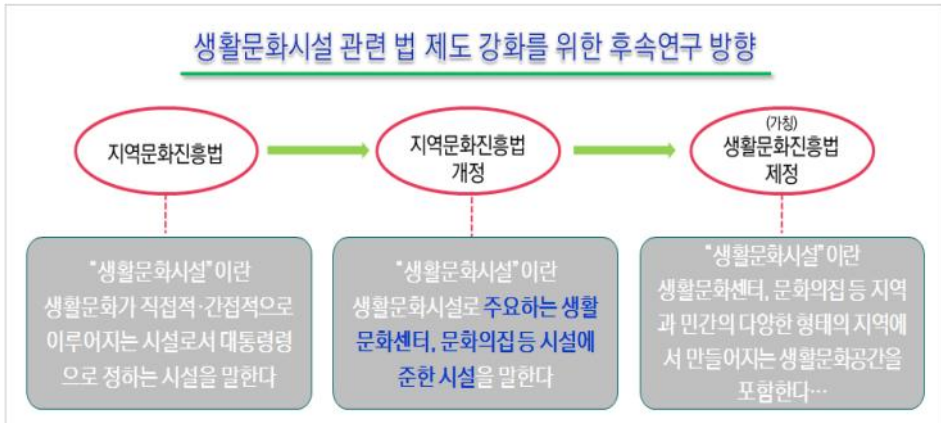
<p>1. 생활문화시설 지원 관련 법제도 효율화를 위한 연구 추진</p> <p>본 연구에서 제안한 협력위원회 설치 및 생활문화지원의 원칙 수립 등 법·제도적 개선과 개정을 위한 연구 추진</p>	<p>2. 생활문화진흥 표준조례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p> <p>지역단위 표준조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중앙(문체부)와 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필요</p>
<p>3. 생활문화시설 통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p> <p>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통계관리 체계 보완이 우선 선행될 필요)</p>	<p>4.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문성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p> <p>현재 조성된 142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중심의 운영 전문성과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계획 수립 필요</p>

1.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제도 효율화를 위한 연구 추진

- 생활문화시설에는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하여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도서관 등 여러 시설이 포함됨. 그러나 문화의집을 제외한 시설은 모두 기존 법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활문화시설 조성 시 법 제도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됨.
- 현재 추세에 따르면 생활문화는 이미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여 법 제도 측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혼재되어 있는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문화민주주의 발현에 지향가치를 둔 법 개정이 필요함.

[그림 17]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 제도 강화를 위한 후속연구 방향(안)



- 이를 위해서 정부와 관련 국책기관(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언급되어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시설을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가칭)생활문화지원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음.

2. 생활문화진흥 표준조례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조례와 ‘생활문화시설’ 조성과 관련된 조례로 구분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래 2018년 5월까지 광역시 및 지자체에서 제정한 생활문화 관련 32개 조례는 생활문화진흥,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시설 조성 및 시설 운영 등 지자체별 생활문화에 대한 접근이 상이한 조례로 제정되어있음.
- 물론 지역에 따라 생활문화에 대한 여건과 상황이 상이하므로 조례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생활문화 정책 기조와 결을 같이 하는 표준조례가 필요함. 또한 문체부와 지자체 간 생활문화 정책의 수

립과 시행, 성과의 공유 및 개선안 마련 등 정책적 연계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표준조례에는 생활문화진흥 정책방향과 주요한 운영원칙 및 실행내용이 담겨야 함. 표준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게 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보완, 개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음.

〈표 57〉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표준조례 연구진 구성 방안

분야	관련 전문가
학문 분야	법전공 교수 문화예술 분야 변호사
현업 분야	문화기획자 생활문화관련 전문가
시민 분야	생활문화 매개자 생활문화 활동가

- 생활문화진흥 표준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생활문화 현장활동가,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생활문화의 당사자인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및 정비를 권고하여 표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간 생활문화 정책의 기초를 공유할 수 있게 함.

3. 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체계 개선

-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통계 기반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이 유일하나 통계 관리체계 미흡으로 자료에 대한 신뢰성 미비함.
- 현재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는 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6개 시설임. 문화의집은 수년간 통계가 축적되지 못하다 최근에 다시 집계에 포함되거나 미등록 박

물관, 미술관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생활문화시설 범위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시설을 포함한 생활문화시설 통계 추가를 시작으로 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함. 또한 통계 방식의 객관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해 보고통계 방식에서 시스템에 의한 전산입력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 나아가 시설에 대한 주요 현황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계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시설에의 개소에 대한 정보, 인력 및 전문인력 현황, 예산 현황, 프로그램 및 주 이용자 등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포함해야 함.

4.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문성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140여 개의 시설이 조성되었으며, 90여 개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음. 현재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양적인 규모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의 양상을 파악할 단계임.
- 각 지역에서 다양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원의 질적 성과까지 제고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 광(2011), 『2010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강운주(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고정민 외(2016),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국립국악원(2016), 『국악연감』.
- 권순석 외(2014),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김근호 외(2017),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동원 외(2012),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호(2012), 「농촌마을 마을회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여라(2017),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류정아(2012),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 양건열(2014), 『생활문화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역할제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현미 외(2017), 『2017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재)지역문화진흥원.
- 양혜원 외(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념기념 세미나.
- 양혜원(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2014),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경영지원센터(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원향미(2016),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적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승렬(1991), 「국립국악원이 역사적으로 해온일과 앞으로 해야할일」, 『국악원논문집』, 제3집, 191~195.
- 정갑영(2000), 「특수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의집 조성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광호(2015), 『생활문화활동소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영화(2016),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열린충남』, 74호, 30~38.
- 최혜자(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추미경 외(2006), 『변화하는 지역문화환경에서의 문화의집 발전방안:생활권 문화창작공간으로
서의 문화의집 강화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17),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

기사 및 보도자료

교육부(2017.06.12.), 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보도자료

내일신문(2016.06.17.), 지자체들 ‘말로만 문화진흥’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199858

한겨레(2016.12.12),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5372.html>

SBS CNBC(2018.03.29.), ‘[지역문화의 미래]지방문화원은 국가문화콘텐츠의 보고’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국립무형유산원: <http://www.nihc.go.kr>

마을예술창작소: <http://artmasulso.net>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

청소년수련시설포털: <http://www.youthnet.or.kr/YouthNetMain2.do>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or.kr>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kaswc.or.kr>